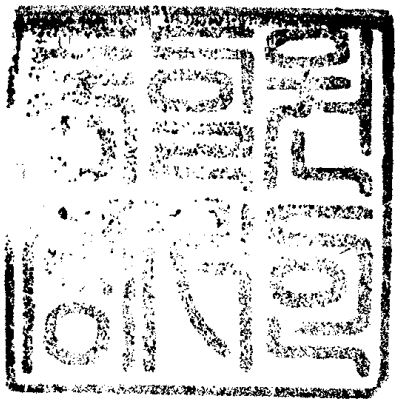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Ⅰ. 미·북 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 ····· 3

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방안 ····· 49

Ⅲ.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 ····· 103

Ⅰ. 미·북 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

주제발표 : 길정우(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토 론 자>

○ 사회 : 구종서(삼성경제연구소 상무)

○ 토론 : 김진기(KBS 해설위원)

김호진(고려대 교수)

양성철(경희대 교수)

이상우(서강대 교수)

<주 제 발 표>

미·북 3단계 회담과 남북대화

길 정 우(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목 차>

1. 문제제기
2. 미·북 3단계 회담 이후 미·북 관계 전망
3. 남북관계 전망
4.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대화 :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1. 문제제기

○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북간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지난 8월 3단계 1차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정치협상의 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사안들이 미·북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 핵개발계획의 동결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핵문제 해결과 관계개선을 병행추진하며 중간선거(94.11.8)시까지 대외정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

는 미국,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중시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함께 모색해야 하는 한국, 핵개발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핵카드의 효용성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과거핵규명을 골자로 한 핵투명성 보장과 미·북 관계개선의 속도 및 향방,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주변국들과 달리 북한의 과거핵규명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북관계 개선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불필요한 간여 또한 한·미간 알력의 소지를 안고 있음.

○ 본 보고서는 한국의 안보 및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기 현안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안들의 전개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자 함.

2. 미·북 3단계회담이후 미·북관계 전망

가. 북한의 의도 및 예상태도

○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의 틀을 확보한 북한은 제네바합의 테두리안에서 실익을 확보해가면서 핵카드의 효용성을 유지, 혹은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할 것임.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안은 과거 주한미군철수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던 상황과 달리 핵문제 대두 이후 체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조정된 목표하에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됨.

○ '95. 4. NPT연장회의 이후 핵카드의 효용성이 급격히 감소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은 그 이전 미·북관계를 상당수준으로 진전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려 할 것임.

- 미국의 대북 핵선제불사용 문서보장
- 대미 평화협정 체결
- 미·북 수교 등

○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은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되 미국주도의 협상을 차단하기 위해 핵투명성보장 문제와 관련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결 약속은 비교적 성실히 준수하며 미국의 선의를 유도하는 한편, 과거핵규명문제에 관해서는 NPT회원국의 의무준수라는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에는 유보적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됨.

○ 요컨대 북한은 핵개발의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확보하고, NPT완전복귀와 핵안전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및 국교수교까지를 상정한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과거핵규명문제는 경수로 사업의 마무리와 미·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보장하는 담보로서 계속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나. 미국의 의도 및 예상태도

○ NPT체제유지와 동북아 여타지역으로의 핵확산 방지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은 우선적으로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돌출행동이 미국의 국내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과의 포괄협상을 지속시켜 나갈 것임.

○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의 병행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이 NPT연장이라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협상입지를 약화하려는 기도를 차단하고, 대북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연락사무소 교환과 관련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협조적 자세를 유도할 것임.

- 단 미국은 대북협상입지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합의 불이행시 무력사용 불배제 등의 입장을 묵시적으로 천명하는 강·온 양면전략을 병행추진 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동결 약속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에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주변국의(재원조달 등) 실질적 참여를 촉구하되, 과거핵규명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쉽게 양보할 사안이 아님을 간파하고 경수로지원 및 미·북수교 일정과 연계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이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관련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돌출행동을 억지하고,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완전한 수교 촉구를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미·북 평화협정이 궁극적으로 수반할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으로서도 중·장기적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고려할 사안인 바, 현 단계에서 심각히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데 미국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아울러 우방국인 한국의 우려를 감안, 한국정부의 주도적 제안이 있기 이전에 미국의 전향적인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

○ 단 미국은 미·북 고위급회담시 북한이 평화협정을 거론할 경우, 동 사안이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천명하되, 적절한 상황과 시점에 미·북간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남북관계 전망

가. 북한의 예상태도

○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이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진행된다고 판단하는 한 한국과의 공식적인 차원의 직접대면은 가급적 회피하려 할 것임.

- 북한은 이미 제네바회담 등을 통해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대미교섭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 남북한과 미국과의 3자관계에서 한·미간 알력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미·북관계 진전과정에서 또한 한·미간 마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과거핵 규명, 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 지원, 대북 경제조치 완화, 평화협정 등)

○ 북한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의 간여를 차단하고 미국 혹은 불가피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강조할 것임.

○ 단 미·북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김일성 사후 한국정부의 대북태도를 문제삼아 대화단절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미국도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미국의 종용을 회피하려 할 것임.

○ 요컨대 남북대화를 미·북협상시 입지확대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기대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을때, 이에 대한

성의표시 차원에서 한국과의 형식적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음.

- 미·북간 제네바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 카터 전 미대통령의 재차 방북의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측의 양보를 기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가로(김일성 생전시 타협과 마찬가지로) 남북대화에 응해 올 가능성은 있음.

나. 한국정부의 기대

○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직접적인 정치협상에 우려를 갖고 있는 한국은 미·북관계 개선의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형식, 수준의 남북대화라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같은 우려는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간여의 여지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것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북협상에서 미국의 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카터 전 대통령 등 비공식창구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 이와관련 남북한간 비밀접촉 창구 활용방안 또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일 수 있음.

○ 한국은 핵문제와 관련, 과거핵규명문제가 미·북회담에서 소홀히 취급되지 않는 한편,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정치적 관계개선문제는 남북대화 재개와 연계되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됨.

○ 한편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 조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핵-경협 연계정책의 단계적 완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의 조치들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음.

4.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대화 :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가. 대응책 모색시 고려사항

(1) 북한과거핵 규명의 한계

○ 북한의 과거핵규명은 핵개발계획의 투명성 확보 노력의 일환인 바, 현 단계에서 북한 핵개발계획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결에 관해 미·북간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안임.

○ 그러나 북한의 과거핵규명 문제와 관련, 미국이 갖고 있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한국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간 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함.

○ 즉, 한국이 북한의 과거핵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한국정부가 이를 소홀히 다룬다는 인상을 줄 경우 미국 및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임을 감안할 때 원칙론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이 이를 강조할수록 북한 핵카드의 효용성은 제고되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북한에 치루어야 할 대가 또한 증대될 수 밖에 없다고 할때(일정수준의 핵모호성을 북한이 유지하려 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한·미간 갈등의 소지는 점차 증대될 것임.

○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과거핵규명을 중시하고 북한이 이를 어쩔수 없이 수용할 용의를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체제보장을 위한 또다른 보장장치 강구 차원에서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더욱 강도높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또한 북측의 주장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한국정부는 북한 핵의 과거규명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시 불가피하게 논의될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제거 문제 등이 한국 안보에 갖는 비중을 냉정히 비교하여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임.

○ 한편 북한이 과거핵 규명문제에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불가피하게 유엔 등을 통한 대북제재 논의가 재개되고 무력사용까지를 상정한 대북제재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것임. 이때 한국의 입장정리가 대북제재의 관건이 될 것이며 한국측의 위험부담이 가중될 것임.

○ 요컨대 북한 핵의 과거규명문제는 한국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원칙론적 혹은 수사학적 차원에서의 강조를 넘어선 한국측의 주장은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인 바, 동 사안과 관련 한국의 입장 표명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됨.

(2) 남북평화협정 주장시 자충논리 유의

○ 한국정부의 기존입장인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 강조는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철에 한계가 있음.

- 한국이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는 법령(영토조항, 국가보안법 등)을 존치시키면서 평화협정은 남북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데에는 이론적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 당사자 지위를 확인받는 방안이 있으나,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로 인정하게 되며 한국 헌법상 영토조항(북한의 영토에 한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친다고 규정한)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원칙적으로 평화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강조하되,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임.

- 미·북 평화협정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정전협정 당사자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상정할 때,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당사자 자격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3) 대북 및 대미 공세적 제의 개발

○ 미·북관계 개선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때, 한국은 수세적 대응 논리로 일관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주도적인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한국이 주장해 온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논의의 시의성을 강조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방편으로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제의함.

- '94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대가로 DMZ근처 전방배치된 남북 양측의 군사력 후방이동 등을 제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남북 실무자간의 회의를 제의함.

- 동 제의는 '94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대북압력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소극적 기도를 억지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임.

○ 남북간 군축논의 재의는(김일성이 카터 전 미대통령 면담시 언급하였다고 하는) 한반도 군축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연계시키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시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임.

나. 남북대화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경직되게 연계시킬 경우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간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함.

- 핵문제와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미측에 천명하되, 해결의 주임무는 미측에 일임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할 분야와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하여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함.

○ 한국의 일방적 조치 추진에 대한 국내비난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미·북관계 개선 및 북·일접촉 등이 국내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2) 세부추진방안

○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추진할 사안들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포함될

수 있는 바, 북한의 공식적 권력승계 이후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이를 추진하되 김일성 사망 이전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무방함.

- 주석 취임이후 시정연설이 발표된 시점에서 정부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천명함으로써 정책추진시 유연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정상회담 추진 이전이라도 사안에 따른 남북대화 제의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북한측의 대화 선제의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대화제의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음.

-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의 방관자세를 오히려 우려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아울러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대북관련 돌출발언을 자제하고 남북접촉을 위한 국내법 및 제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대화에 대한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일방적으로 검토·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핵·경협 연계정책의 부분적 완화,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 공세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군사신뢰구축을 위한 군축논의 제의도 검토할 수 있음.

- 핵·경협 연계정책 완화는 한·미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바, 제네바 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관련 완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한·미간 이행시점과 관련 사전조율이 바람직함.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기업인의 방북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면밀히 추적하고 한국기업인의 방북 허용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 비공식대화 창구를 활용하되, 카터 전 대통령의 역할에 기대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카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역할 인정조치가 바람직함.

- 카터 자신 및 북한당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이때 카터의 임무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 론>

사 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북간에는, 일시적으로 1주일정도 휴식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3단계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남북회담 전략개발을 위한 워크샵 모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정부정책수립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양성철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공화국 정부의 대북·대외정책은 박수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 교차승인이 우리 외교의 주목표였고 우리의 대 중·소 접근에 비례하여 북한의 대 미·일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죠. 북한의 미국과의 접촉이나 관계개선으로 인하여 전통우방인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금이 가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었고 접촉내용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미·북접촉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간에 핵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우리에게도 불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문제가 잘 풀리어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면 남북관계도 돈독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이 바뀌는데 우리만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북·미수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소외된 인상을 주고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도 부처간 조정을 못하는 데서 야기된 혼선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증폭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몇가지 남북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문제인데 남북관계는 북한의 내부정치의 안정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내부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데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느냐 못되느냐는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미 3단계 회담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다음은 평화협정문제인데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시 미군철수문제 거론 여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협정을 주한미군철수까지로 연결짓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핵 규명문제는 우리가 이로 인해 상당히 dilemma에 처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출구보다 입구쪽에서 접근하는 데 비해 미국은 출구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며, 이 문제는 동맹국과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군축이나 단계적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축문제는 외교전략상 선전차원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나 우리가 먼저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핵·경협 연계정책 문제인데 저는 이 정책을 급격히 완화 내지 철회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KOTRA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우리가 북한의 무역대상국중 3위에 랭크 돼 있었어요. 러·중 다음으로 많은 2억$정도 규모인데 이 정도면 현상황에서는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회담 문제는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공식 등장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미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체제 등장의 유용성, 김정일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당 중심의 체제등장 가능성 문제 등에 대한 중·단기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 재개문제인데 우리측이 initiative를 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자세는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관망하는 것이죠.

사 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호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김호진 북미회담이 핵문제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초조한 입장 또 한국과 미국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이것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카터가 나타나서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면서 클린턴 정부의 강압 정책을 카터가 유화적인 국면으로 바꾸어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니까 북한이 한번 더 버티면 마음씨 착한 카터가 또하나 물어다 줄 것이다. 이런 판단도 나름대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섰다. 공식적인 요식행위만 남았지 사실상 김정일이 당총서기고 주석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입관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미국과의 협상을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거나 좌우간 매듭을 짓기에는 자기네들이 국내체제의 정

비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석이 확실하게 들어서고 나서 인사도 이뤄지고 안정된 기반을 확실하게 갖추고 난 뒤, 가면 가, 부면 부, 흑이면 흑, 백이면 백하고 입장을 취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식의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협상이라는 것이 북한의 그러한 의도 때문에 그저 될듯 말듯, 줄듯 안줄듯 하면서 북한이 자꾸 끌고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카터 변수하고 권력승계 미완성이라고 하는 두가지 변수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볼 적에는 우리 정부도 너무 여기에 초조하게 나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미회담에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쓴다거나 한국형을 고집하고 한국형을 받으면 돈을 듬뿍 내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더 뒤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전략은 한국도 좀 신축성있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일원이나 외무부 입장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보수세력과 언론들이 마구 질타를 하니까 안 하는 척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하는 척하고 나서다 보니까 정부입장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게 된 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통일원이나 외무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국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또 북한을 상대로 무슨 제의를 할 경우 걸잡을 수 없는 여론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면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북정책, 북미협상 관계에 대한 우리 한국정부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또 차질없이, 오류없이 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은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이지 한국은 제3자다, 그것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 이런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이번에 2차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렬됐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과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북한에서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제의를 하니까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느냐.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렬했느냐. 북한이 벌써 무슨 나름대로 속셈을 가지고 회담을 결렬시켰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후자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20억달러를 현금이나 원유로 내놓아라,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못가게 하겠다"라는 엉터리 없는 제의를 하니까 결렬된 것이지 미국이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할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핵문제에서 제3국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 회 다음은 김진기 해설위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저는 9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왔는데 한창 분위기가 고조될 때였기 때문에 해설위원실에 가서 해설을 하는데 자꾸 틀려요. 그래서 대북제재같은 것을 얘기할 때도 나중에 보면 달라지고 또 카터 올 때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해설했는데 그게 2~3일 후에는 딴소리한 게 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있다 하길래 뒤에 앉아서 공부 좀 할려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92년초에 김용순이 미국에 와서 캔터 차관하고 처음 미·북 고위급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고서 작년부터 미·북 회담이 열렸으나 한껏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쪽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되죠. 부시 행정부 때만 해도 북한하면 깡패 정권이고 이란·이라크나 리비아처럼 테러지원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나라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외교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캔터차관하고 김용순하고 미국에서 92년 1월달인가 만난 것은, 핵개발의혹에 대해서 북경 참사관 접촉을 통해 미국쪽에서 경고를 주는데 그게 위에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고위급회담을 해 가지고 핵개발을 중지하라는 것을 통고하여 미국의 의지를 전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회담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회담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북한이 81년도에 핵안전협정에 조인을 해놓고 비준을 안하다가 회담이 끝난 후 4월달에 정식으로 비준을 하고 들어가죠. 들어간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식으로 IAEA의 사찰을 받고 의무를 다하면 너희와의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하는 식의 약속을 하니까 들어갔다고 봅니다.

또한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UN동시가입은 우리 쪽에서 교차승인까지 얘기하고 동시가입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분단을 영구화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대하다가 막판에 하는 수 없이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승인해 주고 그럴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수교얘기는 안하고 핵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때 아마 위싱턴에서 듣기로는 북한이 무슨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못 믿는 그런 상태가 됐었다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제 사찰까지 받죠. 미국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까 미국도 사실은 3단계 회담까지 하면서 쭉 보면 북한의 그런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비준도 하고 사찰도 받고 미국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6.25때의 유해도 몇차례 걸쳐서 계속 보내 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북한하고 상대하는 허바드 차관보라든가 카트만 한국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북한측 의견을 이해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허바드 차관보가 한국의 보안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쪽에서는 "우리는 할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을 잡아넣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허바드 차관보는 국가보안법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구요. 그래서 가끔 연설할 때 보면 한국 정부가 자꾸 특사교환이니 남북대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게 미·북회담을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볼때 사찰까지 받았는데 수교는 안 이뤄지고 다시 특별사찰로 간단 말이예요. 작년 3월달에 NPT탈퇴를 선언하고 나온 것은 이뤄질 줄 알았던 수교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미국이 또다시 특별사찰까지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이단자로 고립되기보다는 미국에 대해 투정부리는 것처럼 해놓고는 다시 1·2단계 회담을 6월, 7월에 가졌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3단계 회담까지 왔는데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이 회담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보면 클린턴 행정부가 너무 대내정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정책없이 무지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북한하고 관계를 할 때는 한국정부의 의견을 묻고 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켜주는데 나중에는 국무부의 고위관리들이 자꾸 불평을 해요. 한국정부의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월요일 한 얘기 다르고 화요일날 한 얘기 다르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쫓아와서 강하게 나간다 그러고, 약하면 또 와 가지고 약하다 그러

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정부를 자꾸 못 믿는 것 같더라구요.

북한이 하자고 그랬던 것이 안된 상황에서 미·북회담을 하는데 한국정부에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불바다 소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상당히 불안하더라구요. 가령 11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T/S 훈련은 한국정부가 결정한다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T/S훈련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을 2월달에 강석주가 뉴욕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그 쪽에서 약속을 깨고 먼저 발표한 거겠지만.

그 다음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가령 페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은 필요하면 들여오면 되는데 북한을 자극할까 봐서 그것을 자꾸 감추려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 느닷없이 불바다 소리가 나니까 금방 들여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보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보문제의 중요한 요소 하나하나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하더라구요.

그런데 미국쪽에서 보면 내년의 NPT도 앞두고 있지만, 뉴욕 무역센터 폭파사건도 작년에 있었고 해서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동의 테러국가에 팔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중동의 테러국가로 흘러들어 갔을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뛰어들어 북한하고 접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보고 왔는데 여기 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설을 하려니가 자꾸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북회담을 하고 있는 의도는 결국 미·북 수교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92년 2월달까지만 해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외교관계까지 개선해 줄 용의가 있다, 수교할 용의가 있다, 이런식 이었는데 지금은

연락사무소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는 등 아주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다음달 5일에 3단계 회담이 다시 열린다니까 어떻게 해결될 지는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다만 그런 과정에서 특히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미간의 협상과정에서 핵보유문제 가지고 한·미간에 무슨 이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 핵이 있느냐 없느냐, 핵이 있으면 과거를 규명해야 되고, 핵이 없다면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미국측 의견대로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송영택 박사라는 핵물리학자 한 분을 알았는데, 그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베를린 미국대표단의 전문가회담 대표단으로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던데, 그 분 이야기는 핵무기라는 게 집채만한 덩어리를 주먹만한 것으로 압축시키는 작업인데 북한은 아직 못 만든다 그러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식의 결론이 선다면 한·미간에 이견을 보일 필요도 없죠. 북한은 미국한테 맡겨 놓고 우리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상호사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장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그동안 김일성이 죽으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고, 또 조문 안했다고 북한에서 한 것도 있지만, 결국 북한이 안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자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북한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진 우리 국민여론이 차분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김진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또 그렇게 했다가 더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지난번 정상회담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6.25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일본 갈 때마다 일본천황이라든가 총리한테 사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6.25때는 일제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예요. 그리고 만날 때는 그것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 사과를 한다는 조건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그러면 아마 그런 혼란은 없었을 거예요.

양성철 아까 핵폭탄 말씀을 하셨는데 스웨덴 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핵문제는 핵폭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플루토륨 추출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 회 핵에 대한 규명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박사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장하자 이거예요.

김진기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도가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고, 경수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가 들은 것이라든가 느낌으로는 북한이 경수로를 원래 자기네들이 바꾸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흑연감속로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또 돈까지 대주겠다니까 바꾸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흑연감속로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그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정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물론 협상조건으로 회담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흑연감속로를 완전히 폐기하고 차관 받아 가지고 경수로를 새로 지을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 회 네. 좋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적인 대응책 차원의 새로운 말씀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정부의 기본입장, 기본태도,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부가 일관된 정책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양 교수님은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홍보보다도 정책결정이 됐으면 여론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책과정에는 좀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 정책결정이 되면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특히 대외관계, 통일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워크샵 진행과정에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 장 오늘 이 자리는 학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제가 말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 박사께서 발언하신 내용외에도 활자화 안된 게 많을 것 같은 데 그걸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길정우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중에서 활자화 안된 것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측이 자꾸 하라고 해서 북한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92년 이후에는 경수로 전환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있습니다. 92년 5월에 한스 블릭스가 처음으로 IAEA의 Safeguards Agreement 체결이후 방북했을 때 북한측에서 이미 경수로 전환얘기를 했었고, 두달 뒤 92년 7월에 김달현 부총리가 서울 왔을 때도 북한측이 경수로 보유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으로 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은 작년 7월에 미·북 고위급 2단계 회담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의 핵물리학자들한테 그런 의사를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논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정책적인 입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근살짝 짚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보고서에서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알고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든가, 건국기념일날 퍼레이드 한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결국은 과거핵 규명문제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강조하되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상당히 아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김용순과 캔터가 92년 1월 22일 회담한 이후에 북한이 실망감이 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감이란 것은 북한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읽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에 대한 상당한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상과 착각을 깨주는 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북·미 고위급 회담에 임했던 미국관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2년 1월 당시에 김용순-캔터의 그 미팅을, 그때부터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작년 재작년

의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을 하는 게 또 미국관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출발은 북·미관계에서 출발했는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맥은 한·미간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T/S문제, 평화체제… 한국이 안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다 배제된다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리의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무부 안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정책을 펴고 행동을 해 온 것을 보면 절대 거꾸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제가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얘기를 하다가 안가고 그 자리에서 정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했다가 점프해서 가지, 갔다가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북한을 본다고 할 때는 한국 정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점프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한을 볼 때는 북한을 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북한을 예측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문건만을 보고 북한이 한 이야기하고 행동만을 맞춰보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동안 북·미의 실무자간에 있었던 많은 미팅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혔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뼈아픈 부분입니다. 남북간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30년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북한의 의도가 무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적어도 그동안 남한을 통해서 북한을 인식했던 미국이 이제는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남한을 통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북한을 보고 있다라는, 그게 착각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호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wait & see approach」라는 것과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선의의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참 좋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현실정치에서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개설안하고 가만히 있고 일본이 북한과 비밀접촉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미국의 기업인들이 비밀로나마 방북을 하고 또 연락사무소 문제가 논의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남북대화라는 것은 실속이 있든 없든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적어도 판문점에서 만나는 동안 만큼은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리면 외무부의 대표단이 가서 있듯이 남북대화가 일단 열리면 대부분의 현지에 와 있는 외국대사관 사람들은 회담사무국이든 통일원이든 우리 연구원이든 자기네들이 모르는, 언론에 보도 안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취재하는 데 아주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얘기해 줄 것도 아닌 사항이 분명히 있듯이 실속이 있든 없든 남북대화가 열려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것은 주변국들에게 자기네들이 정말 아무 생각없이 마음대로 헤치고 다녀도 된다라는 그 자의적인 판단만큼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진보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재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정상회담이라도 좋고 고위급회담도 좋고 핵통제공동위도 다 좋지만,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창구를 통한 대화, 저는 카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카터를 통해서라도 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10%라도 있다고 한다면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작년 12월에 남북한을 갔다온 후 UN차원에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소위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20개 프로젝트 중에 안정과 관계되는 것은 두세개 밖에 없고 대부분 경제,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쪽과 북쪽의 어떠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착수하는 데 돈은 얼마 들고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유엔사무총장이 이런 것을 주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남북간에 어떤 대화창구를 개설하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더 적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비접촉을 했던 이홍구 부총리와 김용순 간의 회동을 한번 주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에도 북·미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목소리라는 걸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제 생각입니다만 북경대사관을 통해서 주창준하고 황대사간의 회동을 비밀리에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친서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나, 유엔사무총장까지 우리가 동원할 의사가 있다면 한쪽으로는 이러한 남북간의 비밀접촉을 개설을 하는 노력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김우중씨의 방북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으로 봐서, 기업인을 통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창구를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남북간에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수로와 관련해서 20억$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20억$을 제안한 것이 물론 제네바 합의사항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20억$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북한이 막연히 2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구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경수로가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면 북한이 20억$을 제안한 것으로 봐서 북한이 핵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10년에 걸쳐서 경수로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cash flow가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감독을 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경수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그겁니다. 뿌리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저는 20억$이라는 계산이 상당히 보증금조의 계산일 가능성이 많다. 경수로 지원이라는 문제를 핵동결에 대한 댓가로, 못 믿으니까 사전조치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게 엉뚱하게 그냥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거다 이겁니다.

김진기 저는 카터가 왔다 간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터를 북한쪽에서 초청하고 써먹자고 했던 것은 미국하고 수교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카터를 쓰려는 게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든가 미국하고 수교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카터 카드를 북한이 쓴 것이거든요. 카터가 처음 북한의 초청을 받을 때도 미국의 ANCC 목사하던 이승만 목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계속 클린턴 행정부에 대고 북한하고 수교하라고 편지 보내고 만나서 요구하고 자꾸 그런다구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이거나, 이승만 목사같은 사람은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친북쪽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선으로 해서 북한의 초청을 받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러면 아마 남북관계는 별로 기대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길정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비공식 대화외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핵과 경협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교조적인 접근은 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투자·무역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을 완화한다면 남북간에 공식대화가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부담은 적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느끼는 데 있어서는 기업인이 아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모든 채널이 다 차단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하고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도 우리가 팔짱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양교수님께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체제, 김정일 체제의 유용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주석으로 취임을 했다 그래서 그게 탄탄한 정부다 아니다고 평가하

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정상회담이란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일이 주석이 될 경우 상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대화를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일 이후의 또다른 권력집단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이후의 집단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준비한다고 해서 김정일과의 대화의 패턴이 달라져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는 북한의 어떠한 지도자든지 하나의 legitimate한 카운터 파트로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뭐고 기조가 뭐다는 것을 상대방이 누구든 그것만 우리가 탄탄하게 북한지도부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김정일 이후에 등장하는 권력집단한테도 좋은 하나의 규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시하고 또다른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오히려 그릇된 메세지를 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북 3단계 회담 이후의 미·북관계전망 및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연계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기 우리는 일단 남북간에 대화를 하다가 안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미국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니까 대개 예산내고 시간내고 사람내고 그러면 꼭 무슨 결과를 가져오려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 가지고 미·북관계를 개선시킬려고 할 겁니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관계로 가는 걸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평화협정 이야기가 사이드로만 자꾸 나오고 3단계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미·북 관계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관계개선이 이뤄질 경우에는 결국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미·북관계가 일단 정상화되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의 제2단계 철수계획이 추진될 수 밖에 없고 그 때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 한·미간에 방위조약도 있지만, 미군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 위험한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북관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북한이 얼마나 미국에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흐름을 보면, 68년의 1.21사태, 그리고 울진 무장공비사건이 나고 그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북한에서 수재물자 받은 것을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믹하게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해 안되는 것이 83년 10월에 아웅산 테러를 당해서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수재물자를 받더라구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산가족 교환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북이 수재물자를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물론 그것 때문에 관계개선의 계기는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의 대북관계에 대한 원칙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83년 아웅산 사건이나 87년 KAL기 사건 후에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북경각심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해치기 위해서 남북대화에 응해 왔습니다. 1.21사태 다음에 7.4남북공동성명을 했고 83년도 아웅산 만행을 저지른 뒤 수재물자에다가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KLA기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고위급회담에 응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아쉬울 게 없어요. 북한은 지금 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미국하고 잘 해결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남쪽하고는 더 소극적이지 않을까, 더 대화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북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아까 양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 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김호진 아까 길박사가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과의 문제다, 거기에서만이 문제가 풀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하든간에 미국의 속셈은 북한 핵을 동결하는 그 자체에 역점이 있는 것이지 핵을 가지고 남북한 개선까지 몰고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가지고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미국이 북한을 승인하게 하고 경제원조 받아내고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북 회담에 나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몫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우려인데 길박사가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창구를 트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카터 카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UN사무총장이나, 기타 우리나라 기업인 또는 외국 기업인까지도 북한과의 대화·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활용하면 대단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나 우리의 어떤 주체적 노력이 아닌 제3자의 힘을 빌려서만 이루어졌을 적에 그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이 결여된 그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며, 다만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이 교류를 계속하고 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정부쪽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비판도 있고 했습니다만 항상 무슨 사안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증요법적으로 사후에 대응하는 이러한 자세보다는 미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좋다고 봅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너무 정상회담에 연연하는 인상,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미·북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라 할까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 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철 저도 미·북관계는 큰 흐름에서 보면, 고비가 좀 있었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폐연료봉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북·미간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화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북한이 계속 대결 또는 무슨 요구를 할 때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순탄한 미·북 관계개선만을 우리가 전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번 3단계 제2차 회담이 결렬이 될 경우 북한이 만약에 핵동결 주장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등의 돌출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북관계의 전망은, 장기적으로는 물론 개선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를 거치지 않고 미·북간의 대화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거쳐 하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북 관계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반드시 거쳐가게 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옐친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아직 협상이나 대화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며, 또한 북한의 부주석 이종옥이 중국의 전당대회를 공식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방문중에 있다는 걸로 봐서는 북한 내부 문제에 어떤 나름대로의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내부변화, 정치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으며 서둘러서 initiative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티타렌코의 얘기가 아직 공식적인 지도자가 없는데도 북한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김일성이 과거 거의 50년 동안 북한을 무인승 비행기 정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주석이 공식적으로 되든 안되든 당 비서가 되든 안되든 간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인승 비행기의 속성으로 봐서 비행기가

언제까지나 무인승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아주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시점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안문제에 대한 대북전략 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남북한의 현안이 뭔가, 예를 들면 경협문제라든가 북핵문제라든지 이산가족문제라든지 또 북한이 요구하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라든지 우리의 납북어부 송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장애요인이 무엇이고 또 촉진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전략 개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기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예를들면 여기에는 아마 북한의 대미·대일 수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군축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통일문제 등에 대한 정책개발이 포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국민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혼선, 또 국민한테 주는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당장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initiative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대북전략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될 때 혼선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박사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길정우 대북전략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하시고 중장기 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부가 이게 없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또 정부에서

수없이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수님들도 그 동안에 통일정책자문위원을 하시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다 동원이 돼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데, 핵문제 등을 다룸에 있어서 언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자꾸만 흘러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만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란 것이 사실 만들기도 힘들고 대북전략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고 없다는 것 보다는 저는 오히려 안될 일만 안하면 국민들의 신뢰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변화에 대해 「선의의 무관심」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북·미관계 돌아가는 것과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미국은 나름대로는 자기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판을 짜 놓고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여러가지로 펴 나가는 과정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또 내부의 변화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서 판단해 놓고 정책을 만들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미국이 보는 그런 판단도 우리 정책수립의 준거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미국보다 더 나은 정보에 의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준거는 된다. 그것은 과거핵 규명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확실한 정보를 안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걸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북·미 수교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관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시점에 미·북수교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그동안에 간간이 해왔습니다만 이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중에 김정일이 주석으로 취임하여 시정연설을 할 경우, 우리가 보는 북한의 신정권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라든가 그런 것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7.7선언을 다시 거론해도 좋고, 미·북 수교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적어도 미·북간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때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훨씬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관계개선이 순탄치 않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지가 오히려 좁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핵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다시 제재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은 좁겠죠. 제재로 가면 공조에 참여해야 되니까 어려운 선택이 될거라는 의미에서 북미수교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reservation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국기업인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미·북간에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는 게 왜 한·미간의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핵문제든 경제관계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사안이 결국은 한국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관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핵 규명문제, 아마 재처리 시설문제도 결국 비핵화공동선언에 걸어서 할 가능성이 많죠. T/S중단 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핵·경협 연계완화 문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했을 경우 그건 어쩔수 없이 한·미간의 공조로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입장이 반영된다, 안된다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사교환 논의라든가 페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T/S문제가 지난 2년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보건대, 3개월 늦게 됐든 6개월 늦게 됐든 결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때 그때의 이슈마다 입장도 밝혔고 한데 왜 그랬는가? 너무 비사회과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사태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가지 않고 자꾸만 그걸 거슬러 간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반드시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상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 문제는 결국은 수순을 밟아서 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방향을 무리하게 틀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표현이 상당히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 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문제가 나왔고 많은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북 회담을 지켜보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저게 잘되면 어떻게 될까, 길박사는 낙관적으로 보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미·북관계가 잘 되면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정치적 안정속에서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을 계속하여 남북관계가 역전되는 것이 아닌가. 저쪽에서 흡수통일하려고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반대로 미북회담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면 위기가 조성될 것 아니냐, 그러면 제재국면으로 가고 하면 또 혹시 국지적인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김정일이 집권을 하고 잘 될 것이라는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만일 저기서 핵을 포기하고 군축까지 하게 되면 군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이것은 반드시 연계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이 소외될 리가 없다"고 길박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미북관계가 잘되면 한국의 소외가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국민들과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것은 조금 서운하더라구요. 앞으로 미국과 북한관계가 진전되면 중국·일본이 끼어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체로서의 우리의 권리가 어느 정도 좀 약화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재개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까 길박사께서는 장기·단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을 볼 때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체

제와 위신을 고스란히 넘겨 받고자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김정일이 집권한다 해도 김정일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빈곤문제라든지 대외노선도 분명히 해야 되고 자기의 색깔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다 보면 국가의 방향이 전환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득권층과의 견해차이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김일성 밑에서 하나 같이 되었는데 이제 김정일체제에서 정파가 생기고 이론에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보수, 진보, 급진 등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결국 김정일이 무슨 결정을 하는 단계에 가서 북한사회는 다원화 된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통합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회의 흐름이 자유화되고 다원화될 수 밖에 없고 이건 분열인 동시에 일종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면 잘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관계가 발전되는 것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안정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동독이나 루마니아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에서는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투자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협력보다는 교류에 중점을 둬라, 그래서 다음에 혼란기가 반드시 한번 오기는 오는데 그게 극복이 되어서 저쪽이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투자도 본격적으로 해서 시장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정책에도 통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추진할 때 저쪽의 체제가 불안정하고 혼란이 있으면 정상회담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그대신 다른 대화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길박사 얘기하신 대로 접촉이라든가 대화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사소한 접촉이 쌓이는 것이 역시 폐쇄사회인 저쪽이 역시 우리보다는 불리할 것이고 개방사회인 우리가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때 방안은 뭐냐? 기존채널, 부총리급 접촉, 핵통제 공동위 등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없습니다만 아까 길박사께서도 북측 김용순과 우리 이홍구 부총리간의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기존 총리급회담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끝난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총리급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밑에 핵통제위와 각 공동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대화는 저쪽이 안정기에 들기 전이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의 기본방향은 3통이 이루어지는 방향이라야 되겠다. 즉, 인적 자유 통행이나 접촉이 이루어지고 통신·통상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3통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전면개방, 전면교류를 허용하자고 하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의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공식적이 아니라도 비밀로 하는 것을 정부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정부에서는 그래요, "천안문사태도 그거 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시 통일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쪽의 혼란, 그로 인해서 동독과 같은 상황으로 갔다가 독일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4강

모두가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상태가 오히려 통일보다 안심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two Korea정책이 오히려 정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wo Korea가 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우려한 대로 북한이 잘돼 나가고, 또 조금만 더 궤도에 오르면 우리를 흡수통일하려고 덤빌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런 약한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협박하고 교란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의 안정, 더구나 국제지원하에 안정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통일외교라는 말이 적당한 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 4강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주 안정을 회복해서 성장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북한이 망하든지 붕괴될 때 우리가 독일식으로 흡수통일해도 방해을 하지 않도록 이런 외교도 미리미리 해 두어야 유사시에 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얘기는 여기서 끝낼까 하는데,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정부가 일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 길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미·북수교문제에 관련하여 이미 6년 전 제가 장관으로 있을때 7월 7일날 발표한 원칙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 교차승인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핵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미·북회담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미·북회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김정일 체제도 일단 안정되는 게 좋겠다고 이미 제가 전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같이 보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 쪽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민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핵문제가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잘 안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치 않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북한이 핵을 정말 만든다면 이것은 일전을 불사하고라도 막겠다는 얘기냐? 남쪽이 전쟁을 하고라도 막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쟁까지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거냐? 이런 두가지 중에서 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단호하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럼 전쟁할 각오는 있느냐"하고 물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예요. 결국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핵문제는 해결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미국한테 단호하게 나가지 미국을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조금 단호하게 나가서 한·미간에 사이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선 우리 증권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단호히 나가라는 건데 이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해 내일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 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일도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일 해 주시도록 하고 워크샵 제1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방안

주제발표 :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 론 자>

○ 사회 : 안병준(연세대 교수)

○ 토론 : 김동성(중앙대 교수)

유병화(고려대 교수)

이장희(외국어대 교수)

차영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 제 발 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방안

백 진 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 : 배경, 의도 및 대응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 문제의 제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회담이 본격화됨과 함께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1] 사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어제 오늘에

1) 북한 외교부는 지난 4월 28일 미국과 북한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의하면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미국의 부당한 처사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한다"고 했다.
같은 날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장회의에서 북한은 판문점에 상주하고 있는 북한측 군정위 관계자들과 중립국 감시위원회(중감위) 북한측 초청국인 폴란드 대표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현존 휴전협정은 대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준수하겠으며, 현재 운용되는 판문점 내 양측 공동일직장교간 등 양측 군사당국간 직통전화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5월 24일 북한은 군정위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유엔군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판문점 대표부의 북한측 책임연락군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판문점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기된 문제는 아니며 이미 지난 약 20년 동안 간헐적으로 터져나와 그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휴전협정 대체 논의를 불러 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과거의 주장과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의 경우는 대체로 일과성 선전적, 선언적 차원의 주장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대미평화협정 제안과 동시에 즉각 정전위로부터 일방철수 통고를 하고 중감위의 중립국 대표까지 철수토록 하는 등 휴전협정체제를 현실적으로 무용화시키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군정위의 중국대표마저도 철수토록 하여 휴전협정을 사문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둘째, 과거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은 이를 성사시킬 만한 수단이 없어 대체로 공허한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을 연계시킴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그들 나름대로의 성사수단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8월 미국과의 3단계 회담에서 외교대표부의 교환설치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어 그들 주장의 관철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

이러한 두가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지난 20여년 동안 그들의 대남정책의 중추를 이루었던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앞으로 총공세를 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2] 특히 북한이 휴전협정체제를 무용화, 무실화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 미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 휴전협정체제의 전환문제가 불가피

---

2)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직후인 4월 29일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및 불안정 요인은 북한의 핵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평화협정문제와 관련 남북한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만큼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5월 24일 판문점 대표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 이는 휴전협정 제60항과 61항에 위배되는 일방적 조치로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입장 정립도 시급한 형편이다.

이 글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과 관련한 의도분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미북한 관계개선에 대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글 머리에 특히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사이의 평화협정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의 대체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문제이며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양측이 똑같이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실제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다른 셈이다.

후술하듯이 사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통해 한미동맹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평화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과 관련된 논의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논의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 : 배경, 의도 및 대응

가. 배경

북한은 1960년대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974년 3월 25일 북

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부터 제기되어 온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1973년 1월의 베트남 평화회복에 관한 미국과 북베트남간의 파리협정의 체결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미국, 북한, 중국인데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므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특히 1984년 이후에는 남북한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국, 북한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소위 3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역사적, 정치적 측면에서 전혀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휴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5] 한국은 당연히 한국전쟁의 가장 주요한 교전당사자이며, 현재도 휴전협정에 구속받으며 협정을 이행·준수하고 있다. 휴전협정은 엄격히 볼 때 남북한, 참전 16개국 및 중국이 당사자이나 역시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남북한 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의당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

3) 북한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확치 않으나 우선 휴전협정에 나타난 서명자가 UN군 사령관인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로 되어 있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UN군의 대부분이 미군이었고 미국이 UN군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실질적 교전국이었으므로, 타방 교전국인 북한, 중국과 함께 휴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하였으므로 미국과 북한만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남아 있고, 따라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후술하듯이 북한은 현재도 남북한 불가침 협정, 미북한 평화협정 도식에 집착하고 있다. 최근(1994. 9. 9) 북한 외교부대변인 담화는 남북한간에는 이미 불가침합의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미북한간 평화협정만 체결될 경우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휴정협정체제대체에 관한 소고"(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참조.

나. 의도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령부(UNC)해체, 휴전협정의 미·북한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외국군 철수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장해 왔다. 즉,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유엔사령부란 창설부터 유엔과 무관한 불법적인 국내문제 간섭도구에 불과하며,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이란 사실은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을 종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의 모자를 쓰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한국전쟁과는 별개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유엔사령부 해체나 휴전협정의 전환과 연계될 문제는 아니다. 또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으로 제3국이 이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처럼 1973년 1월 베트남 평화회복에 관한 미국과 북베트남(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간 파리협정의 접근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은 외국군 철수 등 군사적 문제는 협정을 통해 즉각 해결한 반면, 정치적 문제는 남베트남과 인민해방전선(남베트남 과도혁명정부) 등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남겨 두었다.

이러한 접근방법 때문에 파리협정가운데 지켜진 것이라고는 결과적으로 협정체결 후 60일 내 외국군의 완전철수를 규정한 조항(제5조)뿐이었던 셈이다. 또 파리협정 직후 유엔 사무총장은 협정의 내용을 인정하고 전쟁종결을 보장하는 국제

회의를 소집했고 남·북 베트남, 인민해방전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폴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이 참석, 협정을 보장하는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삼중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사이공은 결국 파리 평화협정 체결 2년여 후인 1975년 4월 함락되었던 것이다.

물론 1970년대 초 베트남의 상황과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이러한 전략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대한반도 인식과 대남정책 노선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은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실현의 최대의 걸림돌을 한·미 군사동맹이라고 보고, 이러한 동맹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을 최대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주장은 이러한 북한의 정책목표를 평화라는 수식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카드로 사용하여 그들의 대남전략의 근간인 대미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93년 7월 미-북한간 2단계 회담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은 작년 10월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4개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3단계 제네바 회담 직전인 지난 9월 9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의 가장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라고 언급했다.[6]

북한은 그동안 핵카드를 무기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엄청난 집착을 보여왔다. 북한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서방의 경제

---

6) 특히 이 담화는 남북한 사이에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채택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미국과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공고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여 북한이 여전히 남북한간 불가침협정, 미북한간 평화협정의 도식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발표('94. 9. 9)

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보다는 대미관계개선의 공세적인 측면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즉 북한에 있어 대미관계개선이란 그들의 대남정책 실현의 최대 걸림돌인 한·미동맹관계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목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의 핵카드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 대미관계개선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켜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킨다는 양면이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핵무기 확산방지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대응방향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한미결속의 강화에 있다.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목표가 한·미 동맹 해체, 한국과 미국의 대북억지력 분해에 있다면 이러한 공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상대의 의도의 정반대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한·미 결속과 대북 억지력 강화가 우리의 대응의 핵심이어야 한다. 북한이 뒤흔들때 흔들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확고한 대응을 통해 한·미 동맹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한다. 저의가 훤히 내다보이는 대미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왈가왈부하여 미련을 남기거나 불필요한 오판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단호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가 미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되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정위 철수와 휴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휴전협정(61항 및 62항)과 남북기본합의서(제5조) 위반임을 엄중히 항의하고 그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휴전협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군정위는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황원탁 소장으로 교체한 1991년 3월 이후 단 한 번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왔다. 또 북한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이를 준수하고 판문점 내에 설치된 군사직통전화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휴전체제를 즉각 와해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는 아님을 시사했다.

결국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초조해 하거나 성급한 반응을 해서는 안된다. 상대의 교란책과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국내 일부 여론 때문에 섣부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기본합의서에 천명한 것처럼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이고 당연하며, 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두가지 허상(myths)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적지않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대체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방안제시에 앞서 다음 두가지 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은「평화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휴전체제를 여하히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의「방안」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한 북한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적절한 평화체제 전환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결코 방안이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의사 내지 의지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대의 의지부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묘한 방안(magic formula)을 찾는 것은 허상을 쫓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의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지나치게 휴전협정 대체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마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7] 이는 사실 북한식 문건주의(또는 문건채택 위주의 접근방식)에 적지 않게 영향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건주의식(또는 법리적) 접근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과거의 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 평화의 구축여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휴전협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없는 것은

---

7) 한반도의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휴전협정과 휴전체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등의 용어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rasner는 레짐 또는 체제를 국제관계의 주어진 한 영역에서 행위자(actor)의 기대가 합치되는 명시적 묵시적 원칙, 규범, 의사결정절차 등의 총합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Keohane과 Nye도 마찬가지로 레짐을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규범, 규칙 및 절차의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장치(arrangement)"라고 정의한다. 레짐은 법적 규범이나 규칙이 중심을 이루나 이밖에도 묵시적 행위규범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Krasner나 Keohane의 견해를 빌려본다면, 휴전체제나 평화체제란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분명하다. 한반도의 휴전체제는 1953년의 휴전협정을 바탕으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체제로, 그 주요특징은 군사정전기구외의 남북한간 공식적 대화채널의 부재, 신뢰의 결여, 정치적 군사적 대결구조, 군비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규범, 규칙 및 절차의 네트워크"가 결핍되어 있어 불안정하고 긴장된 체제인 셈이다. 이에 반해 평화체제란 행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규범, 규칙 및 절차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 평화를 보장하는 안정된 체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며,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폐기 또는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전도이다. 실질적인 평화가 구축되면, 또 그러한 평화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형성되면 휴전협정은 사실상 저절로 용도폐기될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허상을 쫓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평화체제 구축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직도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물가로 데려 올 수는 있으나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남북한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채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만 하면 남북한은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화공존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있는 것이다.

나.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 진전이 있어 미북간의 관계정상화가 가시화될 경우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상황이 상당히 빨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정부도 더 이상 현상유지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당사자(2+2)

남북한, 미국, 중국(한국전쟁의 주요 4당사자)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4자합의(2+2)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의 명칭(가령 평화협정)이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한국을 배제한 한국전쟁 종결 합의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의 핵심은 결국 한미공조 내지 한미결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4자 합의의 주요내용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완전 종결시키고 적대쌍방간의 관계를 정상화(아직 안된 경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관계정상화가 4자합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정상화는 새로이 규정하기 보다는 기본합의서를 재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4자합의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연계하여 전체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한미군 문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인 만큼 이문제는 4자합의의 핵심주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된 마당에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억지력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며 동북아 안정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미군사관계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향후 상당기간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4자 합의와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4)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

현재도 유엔사는 더 이상 군사적 의미는 없으며, 명목상 우리측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고 있을 뿐이다. 또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유엔사가 해체된다고 해서 주한외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다. 다만 유엔사의 존재는 일본내 미군기지사용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책만 합의된다면 이를 해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 문제점

UNC는 휴전협정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휴전협정 제17항은 본 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에 서명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C사령관은 우리측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을 준수·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또 군사정전위원회(MAC)의 우리측 대표를 임명한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회담 이래, UNC는 창설부터 유엔과 무관한 불법적인 국내문제 간섭도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1973년 UNCURK 해체이후 UNC 해체에 총력을 기울여, 1975. 11. 18에는 UNC해체 및 유엔 깃발하의 주한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총회결의(3390(B))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UNC의 계속유지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UNC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1975. 11. 18, 총회결의 3390(A))쪽으로 전환했다.

UNC해체문제는 다음 3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UNC의 해체와 휴전협정체제와의 관계이다. 즉 UNC가 해체되면 휴전협정체제가 종료되는가, 아니면 UNC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존속 또는 이행과는 무관한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UNC의 해체가 군사적·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와 해체할 경우 적절한 해체시기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UNC 해체문제는 주한외국군 철수문제와 연계되어 주장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도 절실하다. 그동안 북한은 UNC해체, 주한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미·북한간)으로의 대체를 하나로 묶어서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이 연계될 성질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분명히 밝히고 체계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 UNC의 역할

① UNC는 1950. 7. 7, 유엔 안보리 결의 84에 의해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 그 후 United Nations Command로 명칭이 바뀜)로 설립, 한국전 참전 16개국군 및 한국군(1950. 7. 14, 이승만 대통령이 UNC로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졌다. UNC 사령관은 참전 16개국 및 한국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을 서명했고, 그 이후 휴전협정의 준수·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② 1953. 7. 27, 휴전협정의 체결로 UNC 산하의 참전16개국군 중 미군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군은 모두 철수했다. 한편 미군은 1953.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이 조약에 따라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

며 UNC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휴전협정 체결이후, UNC산하에는 더 이상 실질적인 병력은 없는 실정이며 현재 소수의 인원(300명 이하 : 사령부 간부, 연락장교단(현재 8개국이 연락장교단을 유지하고 있음), 의장병 등)만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③ 휴전과 함께 UNC의 군사적 기능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C는 휴전협정 체결이후 최소한 두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첫째, 휴전협정이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작성된 것이며, 또 UNC사령관이 휴전협정의 준수·집행에 관한 우리측 책임자인 만큼 휴전협정체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UNC의 유지가 필요했다.

둘째, 최소한 1978. 11.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될 때까지 UNC는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지휘체계를 연결시켜주는 법적 매개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UN군으로서의 미군과 그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미군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문에 그동안 이 두 개념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주한미군의 법적 성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이의 작전지휘체계는 새로이 규정되지 않고, 대신 ① 주한미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발령하고, ② 1950. 7. 14의 작전권 이양(한국군→유엔군) 합의를 휴전협정 체결후까지 유효하도록 연장시키는 편법으로 해결해 왔다. 즉, 작전권 이양에 관한 7. 14의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중「현재의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지휘권을 이양한다는 포절에 따라 휴전후(여전히 전쟁상태)에도 한국군은 UNC 산하에 남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1955년 한·미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제2항 :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UN사의 작전지휘하에 둔다). 그러나 1978. 11 한미연합사가 발족되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지휘관계가 명백히 됨으로 UNC는 더이상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매개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휴전협정의 집행기관의 기능만을 해왔다.

(다) UNC해체와 관련문제

① UN의 해체와 휴전협정의 존속여부

㉠ 휴전협정상 UNC는 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주체이므로 UNC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이행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전협정 61항은 적대 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협정의 수정과 증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측 대표가 현재의 UNC기능을 승계할 새로운 대표기관에 합의하면 UNC는 해체될 수 있으며, 협정이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기술적 방법으로는 UNC 사령관과 북측 사령관이 이러한 취지를 추가의정서(Protocol)를 채택, 휴전협정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구체적 대체기관은 양측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우리측의 입장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같은 한미대표기관보다는 한국군 단독의 대표기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UNC가 해체된다고 해서 휴전협정이 자동적으로 실효하거나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조약의 경우, 통상 조약의 일방당사국이 소멸하면 조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 경우 UNC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앞서도 지적했지만 남북한, 참전 16개국 및 중국이며, UNC는 우리측을 대표, 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전협정의 존속과 UNC의 해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UNC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해당하므로, 이의 대체기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② UNC 해체의 안보 파급효과 : 일본내 기지사용권 문제

㉠ 일본은 1951. 9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그에 따른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에 참가하는 군대에 대해 시설 및 역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의무는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이 철수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UNC가 해체할 경우 유엔군의 일본내 기지사용권 등이 소멸, 우리의 군사적 안보구도에 손상을 입힐 우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특히 현재 주일미군은 위의 교환공문에 근거, 일본내의 6개 주요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약 UNC가 해체될 경우, 미·일간에 기지사용권에 대해 새로이 합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 같이 UNC 해체문제는 미국의 동북아안보구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지사용권문제를 제외하면 UNC의 해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군사안보체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기지사용권은 이를 사용할 유엔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나, 이 협정이 상정하는 유엔군은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무력사태가 재발할 경우, UNC가 형식상 존재한다고 해서 유엔군의 자동적 재참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 경우 유엔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의 채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일미군의 경우, UNC의 존재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유사시 한국으로 출동하고자 한다면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1960. 1의 미·일 신안보조약 및 허터·기시 교환공문), 같은 목적으로 미국 본토로부터 출동하는 군대도 일본내의 시설 및 역무를 제공받는데 문제가 없다.

㉣ 국가간의 안보협력은 상호방위나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존부가 관건이며 기술적인 협정이나 조약의 존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안보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안보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과는 무관하다. 일본내 기지사용권문제만 해결된다면 UNC의 형식적 존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으로 북한측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문제가 UNC해체이며, 또 북한이 UN의 정회원이 된 마당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정치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UNC해체문제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③ UNC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북측은 UNC 해체와 주한외국군 철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 주둔하고 있으며 UNC와는 무관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의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으로 제3자는 이에 대해 개입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라) 결론 및 대책

① UNC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해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UNC는 법적으로 해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UNC 해체문제는 우리측이 충분한 정치적 재량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② UNC의 해체가 휴전협정의 파기를 의미한다거나 휴전협정 일방 당사자의 소멸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및 참전16개국)이며, UNC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협정의 준수를 책임지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UNC 해체문제는 UNC를 승계, 군정위에서 우리측을 대표할 대체기관만 설립되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 처리 가능한 문제이다.

③ UNC는 현재 더 이상 군사적 의미는 없으며, 명목상 우리측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의 준수·집행을 책임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측의 UNC 해체 주장이 거셀 경우, 일본내 미군기지사용권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④ 한국안보체제의 핵심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이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UNC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UNC의 해체문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문제로 이의 연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UNC의 해체를 통해 우리의 안보체제 즉, 한미군사협력관계를 명백히 하여 UNC와 주한미군과의 모호했던 관계를 이용한 북한의 유엔군-주한미군(연계) 철수 주장에 쐐기를 박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국제적 보장 문제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합의는 그 자체로 국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국제적 보장체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보장」이라는 개념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란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 적절한 군사적 균형에 기반한 효과적 억지력, 군비감축 등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국제보장체제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이해한 후에 4자합의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엔 등을 통한 4자합의 지지결의, 또는 여타 한국전 참전국의 지지 결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결론

앞서 기술한 방안은 핵문제 해결에 분명한 진전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고려해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조금의 입장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공세 또는 이에 편승한 일부 무책임한 국내여론으로 인해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우에 따라 최선의 정책은 불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에 방향이 잡힐 경우 적절한 시점을 택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분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에서 언급한 4자평화협정(2+2)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4자 평화협정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틀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 토　　론 >

사 회 백교수께서 주제발표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홍구 부총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총리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 백진현 교수의 주제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애초부터 다 따진다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 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렇게 따져서 될 이야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마주 앉아 잘 이야기 하자는 입장인데 그걸 배제하고 나서면 곤란하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정전협정을 깨는 것이 아니고 정전협정을 유지시킬 것인가 깰건가에 대한 선택을 북한에게 준 것이다. 북한이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깨고 나가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있는 것이고, 단지 북한에 달려있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사정해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 회 저는 북한이 정전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공세라고 봅니다.

북측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한 황장군은 지극히 합법적이죠.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관에게 적법한 임명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 아뭏든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자료로 이용하겠습니다.

유병화 우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있고 안정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먼저 올바르고 정확한 법적인 개념이나 이론적인 기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혼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교수는 젊은 분인데 외교안보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상당히 보수적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틀은 같은데 다만 법적인 용어나 개념 등은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늘 현실이고 상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일단 휴전협정이건 평화조약이건 간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고 우리가 잘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휴전협정의 고전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용어도 고쳐야 합니다. 자꾸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역시 「휴전협정」이라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UN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개념이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록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휴전협정의 고전적인 공식은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완전히 종료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의 흐름이 블럭화 되면서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분쟁에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전협정 이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어요. 휴전협정 자체로서 사실상 전쟁을 포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도 해놓음으로써 사실상 전쟁이 종료된 것

입니다. 우리가 자꾸 전쟁이 계속되는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6·25가 일어난 지가 벌써 50년이 되었는데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평화조약이 뭐냐? 평화조약의 핵심적 요소는 과거나 지금이나 어쨌던 전쟁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은 남북한의 분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야기 했을때 남북한에 있어서 어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통일이 되거나 완전히 두나라로 갈라 살기로 작정을 했을때 그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적인 법적 개념을 잘 몰라서 고전적인 입장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평화조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정상화를 뜻하는 느낌입니다. 법적 용어라기 보다는 정치적 용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백교수가 지적하고 제시한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법적 측면의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어떤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 잠깐만요. 평화협정을 대개 요새는 뭘로 이해를 합니까? 평화조약? 평화조약이라는 말은 북한은 전혀 안쓰잖아요?

유병화 평화협정이나 조약이나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협정이라 그랬다고 해서 뭐 협정이 조약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본래적인 의미라고나 할까요. 쉽게 불러 "평화협정" "평화협정" 그러는데요. 결국

평화조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총리 알겠습니다.

유병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화조약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전쟁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관계정상화를 평화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하고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당사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문제는 아까 백교수께서 되풀이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간단히 언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싸움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와 준 사람들이 싸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게 아니고 1·2차 대전을 치루면서도 전부 패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당사자들이 전부 들어가서 휴전협정 교섭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러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하나를 대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internal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표가 교섭·서명을 하면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부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cily협정이나 1차대전을 종결하는 10여개 조약이 전부 그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전쟁의 경우도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냥 분단되는 걸 누가 원했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한테 하나라도 더받아 내면서 합의를 해주고 또 그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휴전협정이 성립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 협정내용에 대해 한국이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한국이 반대한 것만 강조했지 한국이 동의를 했다는 사실,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휴전협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법이 상식이란 건 바로 그런 건데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 어

떻게 휴전협정에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보면 비록 마크 클라크하고 김일성하고 중국 대표가 서명은 했지만, 마크 클라크가 서명한데 대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 모양이 안좋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는 한국하고 미국간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공포로 석방을 하고 난후 당시의 교섭문서들을 살펴보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북한이 버텨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리슨이 합의서를 가져다 주니까 그때서야 동의해 가지고 바로 협상이 진행이 되어 27일날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internal agreement에 의해서 결국은 클라크가 서명을 했으며, 여기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다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하고 UN이 당사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주된 당사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전쟁을 짧지만 두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UN군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7월 3일 이후입니다. 그전에 6월 25일부터는 어쨌든 남북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주된 당사자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거 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맞고 실질적·법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한이 주된 교전국가이고 주된 당사자이며 다른 나라들은 보조적인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법적·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백교수도 그점에서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풀이 안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하다보면 자꾸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기본축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법적인 분석이나 기초적인 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일관되게 나가면 되지 북한이 이런다고 금방 이러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백교수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기야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미국하고의 관계를 평화협정이니 뭐니 하고 그러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한 남북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북한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바로 그러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초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정상화란 말을 했을때 아까 백교수가 남북기본합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점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한 관계는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안되고 있고 세부적인 규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방법일 거예요.

부총리 기본합의서 말이죠.

유병화 예. 지난 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해서 만든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전문가들께 하나 여쭤 볼 것은 내부에서의 헌법적 해석이 구구해서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제대로 못했는데 야당에서도 저렇게 원하니까 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생각에서, 지금 정부가 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유병화 글쎄요? 그점에 대해서 아마 이장희 교수가 말씀을 좀 하실거예요.

부총리 우리가 결의 형식으로든지 뭐든지 한번 받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병화 그 당시 생각으로 몇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국회에 가면 시끄러워질 것 같고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겁을 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의 잘못된 편견은 조약은 국가간에 체결되는 거니까 저쪽을 국가라고 명문화하는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정 사례를 보면 내란이 일어났을 때도 하거든요. 그건 나라가 아니고 반란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의 주체라는 것은 상대방이 꼭 국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기구도 가능하고 국제법 주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하는 상대방도 어쨌든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국가로 보지 않고 통일이 될 때까지 인정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보면 아주 잘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간에 한 것을 조약이라는 용어가 싫다고 해서 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드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조약에 준하는 거니까…

유병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입법사항이죠. 남북관계의 기본

법인데 그걸 안받아서야 되겠어요? 그점에서는 옳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하고 합의해서 다 발표했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는다면 모양새가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내부의 절차마비는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또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우습다 이거죠.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진 않았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제 생각은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지금 그걸 새삼스럽게 받는다 하면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안받았다 그러지를 말고 국회를 거쳤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우리 이교수가 나중에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백교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휴전협정을 거추장 스럽게 생각하고 휴전협정이 있음으로 해서 평화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어떤 남북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까지는 지금 북한이라는 상대가 얼마나 교섭하기가 어렵습니까?

휴전협정의 조문을 들춰보면 잘 알겠지만 휴전협정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남북한의 어떤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DMZ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던 여러가지 법적 메카니즘을 보면 아주 잘된거 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경계선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볼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다시 교섭한다면 그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어차피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통일이 오래 걸

릴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통일되면 어차피 해결될 것이므로 자꾸 휴전협정이 평화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의 기능이 결국은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그런 여러가지 기준과 법적인 메카니즘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야 하니까 이만 줄일까 합니다.

사 회 그런데 지금 말이죠. 법적해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응논리가 문제 입니다. 당사자 문제는 전쟁을 누가 했느냐 하는 의미의 당사자도 되지만 앞으로 평화를 누가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평화를 지켜나갈 주체는 북한하고 남한 아니겠어요?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때 전쟁이 만들어 낸 적대감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평화를 지킬 사람은 북한하고 남한이니까 지킬 사람들끼리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희 우선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황소장의 임명은 합법적이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정전협정 제19조를 보면 정전위는 소위 정전협정의 시행기관이고 또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구별 되거든요.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아까 백교수하고 유교수님 말씀 하신대로 남북한이 되는 것이고 정전협정을 시행하는 기관이 정전위원회 입니다.

정전협정 제19조에 보면 정전위는 임의기관이 아니고 반드시 설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전위원회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북한이 정전위에서 철수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정전협정 제2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 5명은 북측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UN군 사령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각방의 위원 5명중에서 3명은 장성급에 속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준장·대령 혹은 그와 동급한 자로 되어 있어 계급요건만 강조하고 있어요. 5명 임명하는데 3명은 반드시 장성급이고 2명은 소장·준장·대령 혹은 그와 동급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총리 북한은 한국 장교를 임명했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장희 그거 아무 문제가 안돼요. 정전협정 제20조에 의해 이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북한은 91년 3월 황원탁 장군의 임명에 따라서 군사정전위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다가 지난 4월 28일날에는 아예 군사정전위 자체를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북한이 중국에도 부탁을 해 가지고 중국이 철수했단 말이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 협정 제19조, 제20조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뭐냐하면 저는 백교수님 글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변하느냐 안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백교수 논문에 의하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젠 앞으로 이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너무 고정된 시각에서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백교수는 북측의 목적이 결국 미군철수와 조국해방이라고 보셨는데, 나는 그것이 기본목표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선전은 거창하지만 사회주의라는 게 이야기는 부품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별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서 평화체제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백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지금 다급한 것은 민족문제·통일문제 보다 체제유지,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1967년에 동독의 쥬바이네츠키가 2민족 이론을 내세워 최초로 통일거부론으로 나옵니다. 왜 거부론으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방외교와 같이 서독의 동방정책이 표면화되니까 동독이 굉장히 다급해진 겁니다. 다급해지니까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통일을 강조하다가 1967년 부터는 독일에는 2개의 민족이 있다. 하나는 서쪽의 자본주의 민족이 있고, 동쪽 독일에는 사회주의 막스·레닌 민족이 있다. 이 두민족은 근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사실 선전은 거창하고 요새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해 역도다 뭐다 하지만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저사람들이 남한하고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공존체제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체제를 유지하고 남한하고 그냥 상호 공존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이 경계라는 것이 어쩌면 저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현재의 분단상태보다 더 굳은 분단을 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미·북한 핵 합의에도 3가지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미·북한 정치수교, 그다음에 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교수님 논문에도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으로 부터 이 경계선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의하면 통일에는 3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설정해 놓은 통일의 단계를 살펴보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1국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화해협력단계의 문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해당될 것이

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 헌장'이라는 걸 새로 우리 정부가 하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되면 통일헌법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아까 부총리님하고 유교수님 말씀도 나왔지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쟁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원인을 없앨려면 전범자 처벌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는 건드려서 자기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19조와 제20조를 기본틀로 잘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예를 든다면 1956년의 일·소 공동성명을 모델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소 공동성명은 사실 명칭은 성명이지만 그 성격은 조약입니다.

일·소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때 소련이 사할린을 자기영토로 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이 반대를 하니까 소련이 서명을 안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소련과 일본과는 계속 전시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불편하니까 1956년에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영토문제, 즉 4개 도서니 뭐니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서로 관계만 정상화해서 왕래·통상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진실한 의사가 있어 가지고 남북한 평화체제를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진솔하게 담긴 그런 것으로 해서 명칭은 성명서이지만 양쪽 국회의 동의를 받아 조약효과를 내는 그런 형식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해서 남과 북의 당사자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당사자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으니까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조약이라

는 것은 대개 이렇게 정의하죠. 「명칭이나 문건의 수에 관계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에 관해 국제법에 의해 규제되는 성문협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시 말해 명칭이 뭐든 관계없다 이거죠. 조약이 하나로 되어 있든 두개나 세개가 되든 수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국제법 주체에는 주권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전단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문서에 의한 성문협정이란 점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절차 문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통일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회의 절차를 밟아 모양새를 갖추어 놓으면 더이상 딴 소리가 안난다 이런 얘깁니다. 정당성을 다지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안 나올려면 그런 것도 좀 늦기는 하지만 문민정부의 새로운 면을 한번 보여준다는 것도 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명분을 몇가지 만들어서 3단계 3기조 하고도 관련되니까 모양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 회 김동성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성 발표하신 분하고 토론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반복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 안되는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명칭이 정전협정이든 휴전협정이든 간에 북한이 요즘 이슈화 하고 있어 휴전협정문제는 점점 시끄러워 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전협정의 이슈화를 위한 북한의 진짜 의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답처럼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 할때 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의 고려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측이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행동에 대해 연구를 적당히 할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30년간 미국의 외교적 전략과 행태에 대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순식간에 한반도에서 빠져나가 자기네들의 안전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래도 단계적인 철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주변국가들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심지어는 북한 자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철수를 과연 원하는가 이점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을 한다면 북한이 정전협정 문제를 꺼낸 제1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냐 했을때 난 오히려 지금 백박사가 지적 하신 것 중에서 둘째항하고 셋째항에다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뭐냐하면 한·미 동맹체제에 대해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 협상카드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 좀더 초점을 두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응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도 좀 전략적·전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법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상식적이고 뭐가 합리적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전략에 관련해서 우선 아까 백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적인 것은 국내적인 것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라든가 북한에 대해 대응하는 이런 외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선 단기적인 차원에서 대내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세분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대응하지 않으면 또 대응하지 않는대로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는 현 상태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정전·휴전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제의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도록 미국을 설득시키는 방안입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때 지금까지 근 20년씩 휴전협정에 관련돼 가지고 3자회담, 4자회담… 뭐 키신저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달려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최소한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훤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요청할 때 자기들 상식선에서 이정도는 분명하게 대응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전협정문제, 핵문제, 북한하고 미국관계등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과 90년대 이후 부터의 아·태전략에 대한 미국 군부·국방부에서의 많은 연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선 미국입장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 국제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 참가하여 농담반 진담반으로 "군정위에서 중국대표단도 철수하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한참 있다가 중국사람 대답이 "북한이 물도 안주고 전기도 끊고 그러는데 있기가 힘들어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라고 대답하더군요. 또한 옆에 있던 한국인이 "그럼 앞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휴전협정, 정전협정 문제가 진전될 때 중국이 가만 있을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만 있다가 옆에 있는 소장하고 뭐라고 말을 주고 받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휴전협정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일방통행식으로 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미국이 북한한테 부드럽게 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상당한 걸 요구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팔짱만끼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칙에 이 협정은 이러 이러하지 않을 때 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러이러하게 되면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쌍방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정의 적당한 규정에 의해 대체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전략가운데 미국과는 평화조약 협상을 하고 남한하고는 통일문제나 혹은 불가침협정 이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을 해 봤을때 결론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결국 평화협정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해 나감으로써 꼭 궁극적인 평화협정 채결을 의도한다기 보다는 한미관계의 이완이라든가 한국국내에서의 여론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열된 국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이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취해 나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하여금 대응을 하게 하는것 그런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측에서 이 문제에 관한 정리를 잘해서 혼란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논리적인 것이 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제적인 것과 선진적인 것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 체계화된 논리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미북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절대로 받아 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매우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으로서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아 들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속으로 들어가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전위원회가 마비되고 있는 현상이 현재로서는 누구한테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약 3년전에 회의차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평화군축연구소에서 온 모인사하고 제방에서 약 6시간 정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민족간의 문제를 가지고 쇼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문제는 좀 기다리래요. "기다리면 뭐가 돼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논의가 많았는데 무슨 논의냐 하면 정치적 논리와 실질적 논리간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논리는 이제는 밀고 나가야 된다. 미국사람하고 해서 한국을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세배격하고 남북한간에 하자고 지금까지의 자기들 논리와의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제기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예요. 남북한간에 뭘 하자고 해 놓고 왜 이제와서 외세하고 손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갈등에 대해 아래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세문제는 이제 다른 측면 즉 정치적인 측면으로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자기 내부에서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럴때마다 정치논리가 앞서 못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연구팀 같은데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뭘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일이 추진된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기는 아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어떻게 보면 쇼하는 거고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작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전·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몇가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화체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휴전협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가 아닌 건가?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그것이 평화체제고 휴전협정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체제가 아닌가? 아니면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상한 모양새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평화체제인가 하는, 소위 평화체제에 대한 허구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예요. 매우 정치적인 선전에 휩쓸려 있고 마치 국회의원들이나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화체제가 안돼 있다. 이런식으로 정치적으로 써 먹기는 매우 좋은 용어인데 평화체제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허구나 잘못된 시각같은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화체제라는 건 평화가 되는 것이고 휴전체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정전위를 마비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찾으면 될거 아

니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교수님 말씀들으니까 대강 휴전협정 맺어 가지고 그대로 평화상태를 보장해 버리는 경우가 최근의 경향이라고 합니다. 정전협정이 53년 맺어진 것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도록 바꿀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만 바꾸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남북기본합의서하고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북한이 미국이나 UN하고 한 것도 안 지키는 마당인데 남북한간에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게 하는 무슨 보장을 만들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평화협정화 하는 것이 정전협정보다 더 낫고 더 확실하며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남북기본합의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씀중에 여기 저기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정전위가 완전히 겉돌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정전협정을 고친다고 정전위가 제대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북한측이 안나오니까 안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오도록 독촉하고 안나오면 그것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의를 하고 따져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백박사께서 UNC 말씀하셨는데 UNC는 사실은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UNC라는 게 결국은 휴전체제를 이행하고 보장하는 기구란 점입니다. 지

난해에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한미간에 UNC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연합사 사령관은 UNC사령관 모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UNC 사령관이면서 곧 연합사 사령관이예요. 여기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UNC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UN은 미국에게 위임을 줬잖아요. 그래서 UNC 사령관은 UN으로부터 위임 받은 미국의 지휘를 받으면 돼요. 미국합참의 지휘를 받으면 그만이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도 우리가 UN의 멤버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는 끼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연합사 사령관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Military Council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MC라는 게 뭐냐 하면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이 된 하나의 회의체입니다. 그러나 UN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대통령이 UN사령관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합참이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UN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 결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우리 페이스로 끌고 나가는데 매우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문제가 제기 되었어요.

금년 12월에 평시작전권이 우리측에 넘어오게 됩니다. 평시작전권이 넘어오니까 평시에 있어서는 상당한 파워를 갖게 돼요.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측에서는 파워를 좀 더 가질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나름대로의 파워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더우기 UNC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예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의 갈등이 아주 침예하게 대립이 됐었어요.

UNC 문제라는 것은 결국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사람은 UNC 사령관이고 동시에 UNC 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이고 그래서 이는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문제를 다루면서 하나의 부분으로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깊이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휴전협정을 무슨 다른 명칭의 협정으로 바꾸면 그것이 도대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유교수님께서 잘된 협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읽어 볼수록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이 안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도록 해야 해요. 그 사고를 깨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논리속에 빠져서 마치 평화협정이 없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정치적으로 부각 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터의 해방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성 한반도에서 군사적 차원의 작전이 전개될 때 그때는 UN사가 한국에 또는 한국이 UN사에 명령하고 하는 관계속에서 이익·불이익을 따져 볼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UN안보리 결정사항이 아니겠어요?

차영구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잖아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장희 그런데 문제는 UN사의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1950년 7월 7일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해서 UN안보리 권고 결의로서 그 근거를 만들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92년 9월 18일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 했잖아요. 그때 UN에 가입하면서 UN헌장에 의해 회원국은 주권국가에 평화애호국

이라고 전제돼 있어요.

종전의 북한은 소위 말하는 평화파괴자로 규정되어 UN사가 존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돼 왔었던 것인데 북한이 UN에 가입했다는 것은 평화파괴자 대열에서 제외시켜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UN회원국이 되었으니 법적근거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북측의 판문점 대표부 설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유병화 UNC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쓴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 UNC를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73년 UNCURK를 해체하는 합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UNCURK가 해체된 자체가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바로 UN이 철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 조약의 승계문제가 나와요. 그런 복잡한 메카니즘의 기초는 뭐냐 하는 문제인데 법은 상식이고 현실이다 이거예요. 현재의 UNC는 의장대하고 뭐 장교 몇 명만 있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 버려 실질적인 기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차영구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아니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있다는 것이지 전투 사령부는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한미연합사령부죠.

차영구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고 UN사령부가 있죠. 다만 그 내용이 불충분 해서 그렇지…

유병화 아니 그 얘길 하는 거죠. 전투사령부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서 얻는 것도 없는데 왜 그걸 주장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1973년의 UNCURK 해체를 참고해 현실을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영구 미국측에서 얘기 하기를 한반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UN의 관여가 적을수록 우리한테 좋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UN의 관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UN의 룰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백진현 제 생각에는 차영구 박사님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Political War Game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6·25때 UNC가 창설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그쪽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참전국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을 연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미군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군은 UN군 산하의 미군이 아닙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작전지휘권 이양에 의해서 UN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78년에 한미연합사를 만들면서 또 다른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자를 두개 썼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또 다른 루트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쪽에서 보기에는 UN사령관 모자쪽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한국군 통제를 하는데 더 백지위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달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백교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느낀 것은, 문제는 어떤 방안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게 의지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김교수님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미군철수

에 있다고 대체적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선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미군 내 보낼려고 북한이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할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느낌이 오니까 그걸 많이 써먹고 또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저사람들은 6·25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족해방전쟁」이라 주장하고 있단 말이예요. 민족해방전쟁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식민지 통치를 하기 때문에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미국하고 싸운 것이지 남한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고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북한내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평양을 왔다갔다 하면서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던 바 입니다. 미군하고 싸운 것이지 남한하고 싸운건 아니다. 이런 논리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거죠.

아까 차박사께서도 북한내에 정치논리와 실제논리간에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때 까지는 실질논리 쪽이 상당히 우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간에도 평화공존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있어 공존쪽으로 갔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북한 군부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얘깁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전협정을 준수하고 평화상태로 넘어가도록 한다. 이게 무슨 형편없는 소리냐 라고 하는 북한내의 강경세력들의 정치논리가 상당히 우세해져 가지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때문에 지난 92년에 만들어 놓고도 2년동안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이며, 아직도 정치논리가 우세한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실질논리측은 남쪽하고 화해해 가지고 남쪽으로 부터 식량도 좀 얻고 물바구미 병충해 농약도 얻

고 이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미평화협정을 외치고 있는 부류도 말하자면 기본논리가 민족해방전쟁을 미국하고 했는데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란 말이죠.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부수적으로 미군도 내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붙는 것입니다. 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군이 있어도 남쪽의 괴뢰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이 남쪽을 흡수통일해 가지고 집어먹는 이런 입장이 되면 그때야 미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미군이 북한을 보호해 주는 이런 장치까지 해주면 괜찮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김용순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대신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극동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중국도 콘트롤하고 러시아도 콘트롤하고 일본도 콘트롤 해야 할 것 아니냐. 남한이 그 역할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대신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기본논리가 이러합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말은 못해도 실제적으로는 역시 대한민국 타도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실제로 북한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떠들어 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거죠.

대미평화협정이라는 건 평화공세고 정치공세고 하는 차원의 문제지 실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내부의 혼선이 있는 부분을 겨냥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전술의 핵심은 똑 같은 말을 수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선전·선동 전술에 말려들어서 우리 재야나 심지어 언론계까지도 여기에 먹혀 들어서 마치 휴전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 세워야 될 것이 저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서 강의를 하던중 현재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는 경계선이 2개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5%가 몰라요. 그 2개가 뭐냐하면 하나는 53년 정전협정에 의해서 맺어진 군사분계선이고 또 하나의 선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는 불가침경계선이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제11조에 불가침경계선을 남북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불가침 경계선과 군사분계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휴전협정을 대체한 것을 남과 북이 암암리에 이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왔느냐 하면 한미 연합사를 만들고 UNC를 점차 해체해 나가고 군정위를 점차 없애버리고 남북군사공동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남북한이 불가침경계선 쪽으로 인계·인수하는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취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원탁 소장 임명한 것도 그런 조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UNC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 체제로 우리 방위체제를 바꿔 나가는 조치도 그거고 군정위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조치도 마찬가지이고 판문점에 있는 경비병도 KATUSA로 바꾸는 등 전부 한국으로 바꾸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니까 북한 군부에서는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쪽에서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면 진짜 남북한의 불가침경계선으로 바뀌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남북이 경계선을 관리하는 군사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 불가침 경계

선을 관장하는 이런 선으로 남쪽은 실질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될때 북한군대, 조선인민군이 뭘 하기 위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거예요. 조선인민군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국토방위냐? 남조선 혁명하기 위한 군대냐? 소위 혁명군이냐 경비선 이북만 지키는 군이냐라는 본질문제가 북한 군내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야기되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실제 또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정치논리와 실질논리라는 그러한 북한내부의 갈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소위 강경세력이 우세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되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이걸 완전 보이콧하고 조선인민군 대표부를 설치해 가지고 미국하고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남쪽하고는 상대 안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혔던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경계선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언론계도 알아주고 또 학계 교수님도 알아주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걸 알아주는 이런 대내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사실 즉 남과 북이 주관하는 불가침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언론계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학계에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전전의 하나이지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국방력과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한미 공조체제가 얼마나 잘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체제를 넘느냐, 안넘느냐 하는 것은 논리상의 문제지 실질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문제는 역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정당하고, 북한도 합

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의 홍보라 그럴까, 홍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백교수님께서 「2+2」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북한에게 제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책을 세워볼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북한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고 자기 소리만 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본질은 저는 북한 군대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국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말이 미국하고 하겠다는 것이지 들어주지도 않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군대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핵 문제도 저는 북한 군대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군대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북한 군대가 도발행위나 또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는가 라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불가침경계선을 만들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불가침 약속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불가침경계선을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인수를 받고 남쪽과 북쪽이 서로 합의하에 「대체했다」고 유엔에 보고해 버리면 저절로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불가침경계선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된단 말이지요.

우리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남쪽하고는 안하려 하니까 지금 그 대안 문제를 심각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대안으로서 불가침경계선을 만들고 국제적 보장을 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우리쪽에서도 "남북이 불가침 경계선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유엔에 보고하고 또 "우리가 불가침경계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보장해 달라"라고 주변 4강에게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선 남북합의」, 「후 국제적 보장」이라는 구도하에 이 불가침경계선 쪽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 선후 문제를 「선 남북합의」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선후를 바꾸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두가지 대안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장희 김위원님께서 「선 남북합의」, 「후 국제보장」,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 남북합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창설적인 행위가 아니겠는가, 현재 남북한의 정전상태를 평시상태로 바꾸는 평화조약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후 국제보장」은 그걸 재확인하는 현상 확인적인 불가침적인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게 평화협정과 불가침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평화조약은 창설적인 행위고 전시상태를 평시로 바꾸는 현상 변경적인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이란 것은 평시상태를 재확인하는 현상확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 남북합의」, 「후 국제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 남북합의」의 틀은 대충 마련해 놓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또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잘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백교수님께서는 국제보장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남북한간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나은 국제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시각도 있어야 하겠지만 남북이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상호 정치·군사적 불신으로 인해 아무리 많은 문서를 만들어 놓아도 이게 제대로 안지켜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북한쪽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중국이 참여하고 남쪽이 신뢰하는 미국이 참여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틀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어떤 약속이라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 회 저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다자안보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평화정착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그런 걸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양자관계를 선호하고 북한은 더더구나 이런 경우가 되면 자기들이 고립될까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면 당사자 원칙에서, 남북한이 합의하고 주변국가가 다 보장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국이 호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달술 자세한 것은 좀더 연구가 돼야 나올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북한측에 어떤 제안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제안중에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불가침경계선을 남과 북이 관리하기 위해 발족시킨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북한측에 던져 놓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언론홍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문제는 '군사정전위원회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와 남북간에 설치할 군사공동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군사정권위원회가 황원탁 소장이 앉아 있는데 그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군사공동위원회를 우리가 판문점에 설치하겠다. 북측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경계선이 두가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두 경계선

이, 실제로는 하나지만, 행위주체가 하나는 유엔이고 하나는 남북이란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 회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없다고 봐요. 그러나 쌍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문제의 토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평화협정까지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만 북한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도망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백교수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백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백진현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하고 북한이 핵문제 때문에 대좌를 했습니다만 핵문제라는 게 군사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점점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접촉때 관계정상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남북한간에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책으로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남북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한의 협상, 이런 걸 감안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우리 정책의 근본인 당사자 해결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2+2」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게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거고 북한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미국과 북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4자간이 되든지 하여간 북한으로 봐서는 미국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법률적으로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현실적인 고려,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 그리고 남북관계의 국제적인 성격등을 다 고려해 볼때 「2+2」 포뮬러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 회 주제발표를 해주신 백진현 교수님을 포함해서 장시간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나오는 대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Ⅲ.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

주제발표 :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토 론 자>

○ 사회 : 이상우(서강대 교수)

○ 토론 : 구종서(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길정우(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동성(중앙대 교수)
김진기(KBS 해설위원)
김호진(고려대 교수)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안병준(연세대 교수)
양성철(경희대 교수)
유병화(고려대 교수)
차영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 제 발 표>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

이 장 희(한국외국어대 교수)

<목 차>

1. 문제제기
2. 김일성 사후 달라진 상황변화
3.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현재의 기본입장
4. 남북한 정상회담의 추진 기본방향
5.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고려요소

1. 문제제기

정상회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인 1981년 1월 12일 처음 제안한 이래 그 동안 10여차례 있었으나, 남북 모두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려 했었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짙어지면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거론되자 김일성은 지난 6월 17일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미국에게 핵개발 동결의사를 밝히는 한편 한국에게는 조건없는 정상회

담을 제의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했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은 1994년 7월 25일 평양으로 일정이 잡히고, 예비회담도 개최되는 등 구체적 모습을 띠어가다가 그만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반세기만의 남북정상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몰두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다.

그후 7월 11일 북한의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우리측에 정상회담의 무기연기를 공식 통보했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영덕 총리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정상회담의 원칙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면 양측은 정상회담개최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진 조문파동, 주사파 검거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냉했다.

반면 미·북관계는 지난 8월 13일 「북·미 핵문제 합의성명」으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바탕을 약속해 주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수교, 안전보장이라는 핵카드의 당초 목표를 모두 약속받음으로써 사실상 일괄타결을 한 이후 급속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후 미·일 등 주변국과 북한의 수교는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경색됨으로써 남한은 외교적 고립에 빠지게 됐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국면타개를 위해 다시 최근(9월 20일)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남북대화재개를 포함한 정상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다시 국면전환시킬 양측 정치 실세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2. 김일성 사후 달라진 상황변화

가. 이념보다 중요해 진 국익

금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이후 한반도는 향후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에 대한 암중모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의 등소평 사망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어떠한 형태로 형성될 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의 판도를 읽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읽어야 한다는데는 큰 이론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도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떠난 국내외질서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후 탈냉전의 시대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체제하에 민족주의라는 구심력과 지역통합이라는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해체는 민족주의라는 구심력이 작용한 것이요, 유럽통합은 지역통합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와중에서 보스니아 사태 등은 냉전세력이 물러난 힘의 진공 속에서 민족주의간의 충돌이 빚은 사태라 하겠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재등장이라는 시대정신과 함께 각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즉, 이제 이념을 같이하는 혈맹이라는 개념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제 예로부터 한반도를 지배한 국가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쥐었다는 점을 감안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과 남북한의 이해를 냉정하게 전망해 보자.

나.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태도변화

우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과정 속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미국의 입장에서 냉전시대에는 남한은 중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방어하는 이념전의 전초기지라는 이해가 컸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물자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반쪽이나마 남한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남한이 자유세계의 경제개발의 모델로서 부상하는 것 만큼 전세계에 자유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이념전의 전초기지로서의 남한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이제 퇴조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지니게 됐다. 단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조류앞에 주체사상이라는 냉전 이데올로기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쓰면서 핵개발을 그 무기로 들고 나오니, NPT체제의 수호라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이해와 상충한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북한시장이 아직 충분한 구매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처녀지인 만큼 시장개척의 의미를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NPT 체제의 수호라는 미국의 이해에 북한이 맞춰 준다면, 남북한을 차별할 필요를 이제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NPT 체제수호라는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이해는 지난 8월 13일 미·북 제3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현재와 미래의 핵을 동결한다고 북한이 약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충족됐다. 그 후 미·북관계는 급속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옷깃을 남한은 한국형 경수로지원, 과거핵의 규명과 남북대화의 우선 등을 주장하면서 붙들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요구는 최근 9월 23일부터 속개된 미·북한 3단계 2차회담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북한의 반발을 샀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마련이 이번 회담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근본적으로 1~2개의 과거핵이야 자국의 안보에 피해를 주지않는 만큼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미국이 중화경제권의 대두와 함께 이를 한국과 대만으로 견제하려는 대아시아 전략을 펴고 있음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우선을 요구하는 남한에게 미국은 그러면 남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스스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스스로 경색시킨 장본인인 남한이 이제와 뒤늦게 자기네에게 미·북수교를 남북대화에 맞추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최근 한국의 냉전적 국내분위기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북 접근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가? 더우기 미국경제는 지난 1980년대 초 마지막 냉전시기에 벌인 소련과의 과다한 군비경쟁으로 소련이 먼저 넘어간 것일 뿐 피폐해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물론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능력을 상쇄시키는 것이 남한의 대북협상력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어차피 점진적 통일과정에 있는 한국, 더구나 '양키는 떠나라'는 한국에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통일을 시켜서 일본과 중국, 소련 등의 주변강국을 견제할 필요가 없는 이상 한마디로 남북한의 통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등소평의 사망을 앞두고 폭풍전야의 조용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네도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솔직히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상황변화

가 자기네에게 불똥이 튈까봐 원치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이 고와서라기 보다는 북한의 현상유지를 위해 북한과 정치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최근 정전위에서 자국측 대표단 소환을 선언한 것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그렇치 않아도 넘어오는 난민이 많은데, 북한 붕괴시 쏟아질 난민을 제일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식의 개방을 하면서 한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남한과 경제적 이해가 더 많으면서도 정치적 이해로 돌아서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사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1~2개의 핵이라도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한과 같이 첨예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북한 붕괴시 중국과 더불어 난민문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국가이니만큼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또한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시장개척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다. 또 일본은 한반도에 관해 중국과의 잠재적인 세력각축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그 동안 국내문제로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한·소 수교 이후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졌고, 핵문제에서도 8자회담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명백히 지지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전이 김일성에 의한 남침임을 밝혀주는 문서를 한국정부에 넘겨주면서 북한과는 조금 소원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다시 러시아형 경수로의 지원용의를 표명하는 등 유화제스춰를 북한에 보내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남하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보는 것은 변함없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라 하겠다.

3.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현재의 기본입장

위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분단의 원인과 상황이 비록 우리와 전혀 다르지만 이러한 독일의 정상회담의 경험은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가. 동서독 정상회담

서독의 동방정책은 1960년대 후반들어 동독이 세계 제10위권의 공업국가로 성장하면서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에 동조하던 서방국들이 동독에 대해 국가승인을 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시발됐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은 1966년 사민당과 연정을 하면서까지 집권을 꾀했으나, 대연정으로 인해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까지 잃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으로 기민당은 1968년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사민당이 1969년 10월 28일 집권당이 되면서 본격적인 동방정책이 가동됐다. 그리고 서독은 할슈타인정책 폐기와 동시에 정식으로 주변 서방국들에게 동서독간의 대화속도와 동독과의 수교속도를 맞춰달라는 쉘 독트린을 선언했다. 한편 동독은 70년대의 상황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진보정당이 들어서고 미국에도 민주당이 들어서며 서방국들로부터 수교 손짓이 오고, 제3세계가 등장하는 등 세계가 좌의 흐름으로 돌아서자 시간은 자기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동독은 서독의 대화몸짓에 적극 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통일 독일도 통일전에 공식 6회, 비공식 3회 도합 9번 정상회담을 열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슈토프 수상은 제1, 2차 정상회담을 1970년 3월 19일과 5월 21일 동독의 에어프르트와 서독의 카셀에서 전제조건없이 가졌다. 이 정상회담과 동시에 소련의 그레미코 외상과 서독의 에곤바는

1970년 1월 30일~5월 22일사이 독·소불가침조약체결협상을 비밀리에 병행 진행시켰다. 이러한 동서독 정상회담은 둘 다 제3국인 미국과 소련이 그 배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에는 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관계조약체결이 목표이었다면, 남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을 치룬 관계이므로 우선적으로 남북한간의 평화체제수립이 그 목표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동서독정상회담은 상대방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 이후 각자의 기본입장을 많이 수정케 함으로써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고책임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튼 계기가 됐다. 서독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69년 11월 NPT에 가입하고, 또 1970년 5월 7일 동독정부대표단의 서독영역에서의 형사소추를 막기 위하여 소위「독일 사법권의 기한부 위임에 대한 법률의 효력정지안」을 독일의회에 상정, 야당의 기권하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위해 서독은 미·영·불 4개국 협의체와 긴밀한 의견교환을 했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여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치밀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동독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독은 당시 동독이 내놓았던 WHO 가입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특히 제5차 정상회담은 1981년 12월 11~15일사이 독일땅에 미국 퍼싱-Ⅱ와 소련의 SS-20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라는 동서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슈미트 서독수상이 동독의 베르벨린제에서 동독 국가평의회의장 호네커와 회담했다. 여기서 양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독일땅에서 두번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하고 대내외적으로 독일민족의 민족자결의지를 천명했다. 동시에 서독은 동독이 원하는 내독거래와 관련하여 장기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미소에 의해 조성된 독일땅에서 전쟁분위기가 깨끗이 일소되었다.

다시 말해, 동서독 정상회담은 동독이 자기편에 승산이 있다고 믿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그러면 이와 같은 동서독의 상황과 비교해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북한부터 살펴보면 세계의 큰 흐름이 이제는 이념전쟁도 끝나고 동구권도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단일 사조로 흐르면서 북한이 개방을 하면 주체사상이 설 땅을 잃는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에서 자기편의 승산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동독은 당시에 세계 10위권의 공업국으로 주변국들과의 이해가 많았지만,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핵게임만 아니면 중국 외에는 북한의 체제붕괴에 대해 그다지 억울해 할 주변국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핵게임으로 미·일을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어내어, 민족통일이이라는 차원보다 체제존립과 경제난을 해결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에 대해 주지하다시피 주변국들은 과거 핵은 묻지 않고 미래와 현재의 핵동결만을 전제로 수교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공갈로 자기 페이스대로 남북관계를 끌어가도록 둘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핵공갈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현재로서는 미·일로부터 국가승인만 받아낸다면 남북대화에는 별 흥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수교함으로써 제1의 가상적이 없어진 지금 북한은 남한을 제1의 가상적으로 삼음으로써 체제를 공고히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부쩍 심해진 북한의 대남비방은 이러한 설명을 반증해 준다. 그러나 국방비를 더 증가시킬 여력이 없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난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북한은 중국식

개혁을 하기위해 현상유지를 하면서 핵공갈로 주변국들로부터 최대한의 경제협력을 유도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로써 만족할 만한 경제협력을 얻게되면, 북한은 이제 김정일을 경제난을 해결한 지도자로 부각시키며, 통일을 거부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개발독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이 바라는 것은 민족통일보다 실체인정을 통한 남한과의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동요를 방지하고 권력기반을 다지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월 27일 현재에도 북한의 이종옥 부주석은 북·중관계의 공고화와 경제원조요청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동독처럼 북한이 어떤 승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부터 김정일체제의 승인을 받아낸다는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한다면 부수적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의 협상력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북 회담을 의식, 남북대화를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현상유지를 바라는 것은 현재 러시아나 독일형의 경수로를 고집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정상회담에 대한 남한의 입장

남한으로서는 이와 같이 체제단속을 위해 남북대화에 별 흥미가 없는 북한을 끌어내어 대화를 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통일에 대해 민족자결의 원칙을 다지며, 장기적으로 북한시장을 다른 서방국이 선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통일저해요인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서독마냥 주변국들에게 남북대화속도와 수교속도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는 쉘 독트린 같은 것을 줄기차게 요

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 요구도 김일성 사후 남한국내에 불어닥친 때아닌 공안정국을 돌아보면 주변국들에게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경색시켜 놓은 당사자가 지금 다시 미·일과 같은 주변국들에게 매달려 새삼 쉘 독트린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인 것이다. 이로 인해 남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잃었을 뿐더러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이제 남북대화에 관한 한 미국의 후의를 고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남한 국내를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은 1966년과 1968년의 서독의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시대를 연상케 한다. 당시 서독도 긴장완화의 시대에 냉전시대의 외교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결국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외교적 고립에 빠졌다. 그리고 사민당으로 집권세력을 바꾸고서야 서독은 시대흐름에 맞는 외교정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재 세계흐름은 탈냉전이고 비록 북한의 핵게임이 있지만, 동북아도 긴장완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남한에는 강·온의 두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우선 강경파의 흐름은 핵과 경협을 연계시켜 1~2개의 핵이라도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 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과거핵이 규명될 때까지 북한의 경제난을 방치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겨 흡수통일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유지와 최대한의 경제협력을 위해 끝까지 과거핵에 관한 한 NCND 정책을 고수할 것이므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동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온건파는 핵과 경협을 연계시키면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른 서방국이 북한경제를 선점해, 이후 통일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이전에 빨리 경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 만큼 이것으로 북한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과거핵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북·미회담을 통해 핵개발계획에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북한의 핵과거는 자유롭게 규명될 것이니만큼 북한이 꺼려하는 특별시찰 운운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그만 경색시키고 실리를 꾀하자는 입장이다.

동구권의 몰락으로 북한은 이제까지의 무역상대국을 잃어버렸고, 새로운 무역상대국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무역상대국들은 모두 경화로서 결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제품들은 국제경쟁력이 없다. 이제 똑같은 돈을 주고 품질이 낮고, 가격만 비싼 제품을 그래도 이념이 같은 국가라고 물건을 사주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북한은 서방의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경협과정에서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중국식의 개방이라고는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인구 2천만의 소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효과는 중국과 달리 금방 전국에 파급될 수 있다.

더구나 정보화시대에 하부구조를 정비하지 않고 어떻게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하부구조가 정비된 이상 어떻게 정보가 전국에 파급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는 분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과과정에 유의하며 온건파들은 경협을 통한 상당기간의 공존을 거친 흡수식 통일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것을 동서독에 굳이 비유하자면, 강경파는 1960년대 후반 기민당에 속할 것이고 온건파는 사민당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강·온 두가지 흐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주변국의 이해와 시대정신에 맞는지는 미·북 접근과 일·북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미·북, 일·북 수교가 되면 우리가 외교적 우위를 잃을 뿐더러 북한의 협상력이 강해지며, 그 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주변국에 뺏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하고 뒤늦지만 미국에게 남북대화와 수교속도

를 맞춰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남북대화 분위기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의 사소한 기득권 다툼이 민족통일의 저해요인이었다는 역사적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히 민족사의 앞날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 남북한 정상회담의 추진 기본방향

가. 대화전략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통일에 대해 민족자결의 원칙을 다지며, 장기적으로 북한시장을 다른 서방국이 선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통일저해요인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은 동독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동독의 WHO 가입안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냉정히 생각해 볼 때, 남북간 정상회담은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보다 당연히 앞서야 한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자기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북·미, 북·일 수교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핵에 관한 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끝까지 NCND정책을 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공갈에 남북관계의 기선을 뺏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핵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서 명분은 저쪽에 주되, 실리는 챙기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별사찰이라는 용어 대신에 과거핵에 대한 실질적인 규명을 위해 주변 우방국과의 의견교환을 밀접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견교환도 이미 세계는 이념의 시대에서 국익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한 의견교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첫째, 화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변국들이 이를 빌미로 남한을 고립시키도록 하는 우는 절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김일성사후 표출된 우리내부의 강경보수집단의 대북 경직된 태도를 슬기롭게 자제 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이 종전같이 상호 적대감정을 부추기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이념적 공간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독은 정상회담 전인 1969년 11월 NPT에 가입했다. 그리고 서독은 동독의 UN가입 및 유럽안보협력회의에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약속도 미리 했다. 둘째, 남한정부는 야당을 포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정상회담추진과정에 깊이 관여시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고 최소한 첫번째 회담은 만남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쌍방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큰 매듭을 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 두고, 자세한 사항은 차후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목표

남북정상회담은 왜 해야만 하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한국내에 대다수의 통일문제 전문가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정상회담 개최에 의아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 의아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역대 정권들이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한데서 온 불신이다. 사실 5·6공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할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은 체제부담을 갖지 않는 문민정부인 김영삼정

부에게는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는 실향민을 중심으로한 보수 진영에서 정상회담에 따른 전제조건의 충족 요구이다. 그 조건으로 6. 25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전범처벌문제, KAL기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이다. 사실 6. 25 전쟁을 일으켰고, KAL기 폭파와 같은 테러행위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거를 잊어서도 안되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민족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놓쳐서도 안된다. 이러한 문제도 정상회담 예비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

필자는 위의 두가지 반대이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민족공동이익의 조기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번 실수를 교훈삼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제 신중히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히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1) 비논리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있는 문제해결의 돌파구

90년대 통일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평화, 장기적으로는 통일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자칫하면 분단고착화로 되고,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치적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적 체제적 갈등극복의 문제가 대두된다. 전자의 경우,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UN에 동시가입하고 있는 마당에 남북한간의 법적 관계를 주권 국가간의 국제법적 관계가 아닌 특별관계라고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의 제도화는 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즉,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전쟁을 치룬관계로 전후배상, 전범처벌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이 농후한 복잡한 문제는 남북한 권력실세들의 정치적 대결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유럽에 비해 제도윤리보다 개인윤리가 강하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하는 남북한의 경우 양체제의 실권자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은 남북한 문제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 민족자결 원칙의 확인 및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의 과시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일·중이 진정으로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가?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가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싸고 얽혀 있다. 최근 핵문제로 남북한의 모든 경협이 중단되고 있는 사이 일본이 북한과 벌이고 있는 경제적 교두보 마련 작업, 미국이 북한에 무기판매를 승인했다는 소문, 중국이 핵문제에 북한편을 들면서 북한지역에 경제개발권을 취득하려는 일련의 낌새 등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의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현재 한반도 문제가 남북사이에 어떠한 대화채널이 없이 제3국을 통해 의견교환이 되고 있는데 연유한다.

이런 면에서 남북정상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민족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미·소·일·중 4개국은 그 틈새를 끼어들어 민족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명분이 없어진다. 다시말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민족문제의 해결노력은 민족자결원칙의 확인이자 당사자 해결원칙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시적, 상징적 효과도 있다. 동서독은 제5차 정상회담을 통해 당사자가 직접 만나 독일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민족간의 단결의지를 다짐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독일에서의 전쟁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었다.

(3) 남북연합의 제도화 과정

남한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

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은 ①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하고, ②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③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안은 ① 화해·협력의 단계 ② 남북연합의 단계 ③ 통일민주공화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처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은 과도적 통일체제의 중간단계로서 통일국가가 실현될 때까지의 중간과정인 「남북연합」을 상정하고 있다. 이 남북연합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합의된 남북연합헌장을 법적 근거로 한다. 그리고 이 합의된 남북연합헌장에 따라 남북연합은 ① 최고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 ② 최고 집행기구로서의 남북각료회의 ③ 쌍방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 ④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사무처의 기구를 둔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화해·협력단계의 기초라면, 남북연합헌장은 남북연합단계의 법적근거이고, 통일헌법은 통일민주공화국의 법적 기초이다. 김영삼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98년까지 2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완성시킨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새정부가 남북연합을 제도화시키려면 우선 남북연합의 법적기초인 민족공동체헌장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 헌장은 남북정상회의라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완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합법적인 단계이다.

동서독 제1, 2차 정상회담도 1972년 동서독 관계정상화의 법적 토대인 기본조약의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과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다.

(4) 일제 잔재처리 문제와 민족공동의 이익 문제에 대한 공동 협력

독일통일 휴유증 중 과거청산문제가 사회의 정의실현 차원에서 큰 혼선을 빚었다. 그 이유는 동독관리들의 고의적인 자료훼손 및 조작에 연유한다. 남북한의 경우 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처리를 위해 민족정기확립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객관적 자료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남북정상들이 바른 민족사의 확립차원에서 조속히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2차대전중 일본전범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민족이익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위해 남북지도자의 확고한 협력과 단결의지 표명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5) 상대방의 진실한 의지 확인(실세간에)을 통한 신뢰구축의 분위기 조성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북한의 2중적 태도와 남한의 공안적 사고로 쌍방 실세들의 진실된 의지가 제대로 직접 교환된 적이 없어 상호 불신속에 진행되었다. 이제 남북한의 실세들인 최고 실권자가 직접 만나 서로의 진솔한 의견교환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진실된 의사파악의 확인과정을 통해 남북합의서를 비롯한 향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실천에 대한 신뢰구축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조정·준비되고 진전되어야 한다. 이는 루마니아 상황이나 흡수식 통일과 같은 상황에서 오는 대혼란과 돌발사태를 막고 북한의 평화롭고 질서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정상간의 의견조정이 매우 필요하고 그 만남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경우 정상회담은 얼음을 깨는 만남으로서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정상화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5.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고려요소

가. 만나는 시기

만나는 시기문제에는 두가지 점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는 서두는 것이 좋으냐 천천히 만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면 그 만큼 바람직한 점이 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불투명성·불확실성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정상회담이 빠를수록 좋다. 최근 기업들이 북한지역을 단순한 시장개념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고, 남북경제교류는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속히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의 통일로 이르는 단계와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경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반면, 둘째로 시기선택은 국민적 불신을 사는 시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1992년 2월에 정상회담제안이 정부에 의해 흘려 나왔을 때, 그 해 4월 24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은 터라 정부여당이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할려는 의혹을 국민과 야당으로 부터 받았다.

그래서 만나는 시기는 위의 2가지 점을 고려하되, 독일통일에서 보듯이 통일이후의 민족통합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가급적 조기 만남이 좋을 듯하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나. 만나는 장소

동서독의 경우에 회담장소문제가 예비회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남한의 경우 정상회담장소는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어디든지 좋다고 하였다. 과연 그

러할까?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 그리고 제3국 어디가 적합한가? 동서독의 경우 서독의 수상이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오는 것을 동독이 반대했기 때문에 소련의 그레미코 외상의 중재로 동베를린 대신에 Erfurt를 택했다. 이당시 동베를린을 반대한 동독의 이유는 서베를린은 서독연방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정치구역이라고 주장해온 데 연유한다. Erfurt로 선택된 것은 서독에서 서베를린을 경유하지 않고 쉽게 갈수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어떻든 장소문제는 남북한 양측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 곳이 좋다. 즉, 남북한의 각각의 수도를 피하고 휴전선에서 가까운 소도시로서 북한의 개성과 남한의 의정부나 동두천을 생각해 본다. 다만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다. 의전 문제

동서독의 경우 동독은 서독으로 부터 국제법적 승인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서독수상을 일반 주권국가의 국가원수 예우로서 국기 게양과 국가연주가 있는 의장대 사열까지 받게하는 등 예우를 갖추려 했다. 이 문제로 서독측은 반대하다가 동의하였다.

남북한의 경우 내심이 어떻든 양측 모두는 상호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주권국가간 국가원수 방문시에 행하는 국기게양과 국가연주가 따르는 의장대 사열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떻게 축배를 들고 어떻게 만찬사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등 대북 용어선정 그리고 영접부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전의 기본방향은 합의서 제1조「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는데서 상호간의 관계는 국제법적 관계는 아니나 동등성과 비차별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양측의 국가원수가 머무는 동안 「특권과 면제」 및 「불가침권」 등은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의전은 묵시적 국가승인효과를 북한에 주지 않고 남북한의 특별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 참가자 문제

동서독의 경우 서독은 양독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 외무부장관보다는 내독성장관과 수상실 장관을 대동하려고 했고 동독은 가급적 외교부에서 이 행사를 관장하려 했다.

그 진의야 어떻든 남북한은 그 상호관계를 국제법적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남측의 경우 통일원장관과 통일관련부서 책임자가 대동하고 외무부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것이 좋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야의 국회의원의 참가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

마. 의제

동서독의 제1, 2차 및 5차 정상회담을 분석해 보면, 동독은 주로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적 승인과 같은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서독은 인간적 고통의 경감을 위해 자유왕래, 교류·협력의 촉진과 같은 실리를 추구했다. 이 양측의 상반된 이해는 추후 1972년 12월 기본조약에 적절히 타협·수용되었다. 그리고 과거청산의 정리문제는 예비회담에서 다루었다.

남북의 경우 기본합의서에는 평화문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는 군축과 불가침문제 그리고 통일방안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남북한 양측의 통일방안의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정상회의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정상회담의 첫 의제는 그동안 한반도의 모든 긴장의 주원인이 핵으로 인한 오해에서 왔다는 점에서 핵문제에 대한 솔직한 정상간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과거핵문제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미 동결키로 한 핵동결을 재확인, 이로 인해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발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내외에 재확인하는 것은 상호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매우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의제는 독일과 달리 현재 남북한은 상호 전쟁을 치룬 결과로 정전협정의 기초하에 상호간 전시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적대성을 배제하기 위해 상호 정치적 화해를 통해 전시상태를 종결짓고 조속히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의 구체적 모습은 남북한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양정상이 이번 기회에 「남북 평화공동선언」을 하고 추후 쌍방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 문본을 교환하면 된다.

셋째는 합의서 제1조에 따라 상호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상대를 「반국가단체」니 「원쑤」니 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나 법제도는 상호주의에 따라 정비할 것과 차후 쌍방은 평등을 기초로 상호 국제법적 국가간이 아닌 최소한 특수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동독 대표단이 서독을 방문하기 전에 동독차별 법제나 동독대표단을 형사소추하는 법률을 개폐했다.

넷째, 상호간에 대화채널을 시급히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정상간의 하트라인, 국방최고당국자간에 직통전화 설치, 그리고 쌍방 통일문제 실무자간 만남의 정례화 등도 포함한다. 이는 언제든지 쌍방간에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통신하여 오해를 풀고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양독은 제2차 정상회담후 40개 전화선과 16개의 텔레팍스를 증설한 바있고, 1981년 긴장고조시 양독정상의 직접 만남은 독일땅에서 미·소에 의해 조성된 전쟁분위기를 일소시켰다.

또 과거의 정리문제, 즉 6. 25전쟁과 테러문제는 우리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정상회담전 해야할 예비회담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하고 정상회담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측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될 기본원칙과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준비하고, 의안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여 임하는 것이 좋다.

바. 국내외적 공조체제 준비

동서독 정상회담은 시작전에 브란트 수상이 연방의회에서 그 회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았고 회담후에도 연방의회에 보고하여 야당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란트 수상은 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 협의체와도 충분히 설명을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남북정상회담도 효과를 보려면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우방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효과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정상회담을 과거처럼 비밀리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지결의를 사전에 받

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 회담분위기 조성에 협조케 해야 할 것이다.

사. 예비회담을 통한 충분한 실무준비

동서독의 경우에도 제1차 Erfurt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충분히 실무자간에 3번의 예비회담이 있었다. 여기서 만나는 장소문제, 의전문제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다. 또 제2차 Kassel 정상회담(1970. 5. 21)전에 동독정부는 5월 5일 Kassel 정상회담 개최시 동독을 차별하는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 서독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주었다. 뿐만아니라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독은 상호 신뢰를 쌓는 국내외적 조치를 스스로 하였다. 그예로 서독은 1969년 11월 28일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다.

남북한의 경우도 정상회담 예비회담에서 충분히 사전 의견조정을 거칠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남북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법제도는 냉전논리를 벗어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전에 쌍방은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해 상호를 적대시 하는 관련 법령을 과감히 개폐는 작업도 예비회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무예비회담 대표들은 남북정상회담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입장에 입각해 회담준비를 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법적관계는 특별관계와 잠정성을 바탕으로하며,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라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토 론>

사 회 복잡한 문제를 조리있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논하는데 있어 크게 보면 4가지 문제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정상회담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는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하며, 우리가 할려고 할 경우 북한이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셋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즉 상징적인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받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네번째는 장소, 시간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 발표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은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을때 북한이 응할 것인가 안 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네가지 인데, 이 네가지를 먼저 결정해 놓아야 그 다음에 추진방향이 나옵니다. 회담이란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 바람직한가와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어 전제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발표내용의 전반적인 느낌은 실리를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교두보를 만들려고 한다, 미국이 북한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소문도 있다, 남북이 합쳐서 일제의 잔재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들이 흐름에 깔려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해석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적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고립됐으면 됐지 우리가 고

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대북수교를 서두른다는 인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개선하고 수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수교할 의사가 있는 것 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도 여러가지 내부문제로 인해 당분간 정상회담의 의사가 없고, 어쩌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만나야 할 대상이 아니예요. 만나야 된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만날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 그리고 "만나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주변국가들은 다 만나고 하는데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의미 등도 내용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둘이서 최종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유병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유병화 우리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의연하게 추진해 나갈려면 정확하고 올바른 법적개념, 이론적 기초에 근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휴전협정의 개념이나 기능이라든지, 또 여기 저기서 떠들어 대고 있는 평화조약도 올바르지 못한 법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휴전협정의 기능이 무력충

돌의 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면 평화체제가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교섭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달리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화조약만 하더라도 과거의 고전적인 개념이나 현재의 입장에서나 어쨌든 전쟁의 원인이 해결되어야 평화조약이 체결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이 통일된다든지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는 한 평화조약이라는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관계정상화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기본합의서가 되어 있는 마당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식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평양에 이름은 뭐라도 좋습니다만, 대표부라든지 연락사무소라도 제도화해야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통일원에서는 교류나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자께서 말씀한 것과 관련하여 전쟁을 해서라도 비핵화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비핵화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비핵화를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슬기를 모아서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양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양성철 이장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동·서독 관계를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북한은 동독이 아니고 남한은 서독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정상시기의 정상회담하고 비정상시기의 정상회담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굉장히 비정상의 시기라고 볼 때 우리는 정상회담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으로 갈 수 있는 정책과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5공시대와 같이 1회용으로 끝날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입장에서, 만날 수 밖에 없는 전략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께서 에곤바와 그로미코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남북한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로미코는 누구이고 에곤바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받는 인상으로는 에곤바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inside track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outside track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로미코는 과연 누구냐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트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체제경쟁에서 이겨서 미국이 베트남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한에 그대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변수하고 남한변수를 단순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내부사정이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매우 복잡하니까 북한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내부의 사정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상회담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한도 역시 단순변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부정치가 민주화·자유화되면서 여론도 중요해지고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초정치적·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국내정치를 보면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어 국민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에서도 돌출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초당적인 대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의 외교문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대여·대야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 북한문제까지도 혼맥상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나는 내년 6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통령은 국내정치의 가닥을 잡기보다는 통일문제, 대북문제, 안보문제에서 정부를 이끌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계기를 잘 잡지 못할 것 같으면 더 큰 혼란과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대비해서 안보, 대북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가 초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더 토론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를 양 선생이 여러가지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호진 이 교수님의 발표논문을 읽고 느낀 것은 먼저 북한이 대단히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데 반해 한국은 상당히 냉전지향적인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독일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구축했던 66년~68년 기간에는 양독관계가 비뚤어지고 정상회담도 안되었는데, 68년에 사민당이 집권함으로써 물꼬가 트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현정부로서는 곤란하고 좀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금 입장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과의 수교를 통해 국가승인을 받고 경제적인 협력을 얻어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결국은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것을 얻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미군철수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대남적화통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할 힘도 없고 해서 포기했다. 그들은 살기도 힘드니까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서 평화체제만 하고 한국이 그들관계를 떼지만 않으면 족하다는 것이 북한의 진의인데, 한국에서는 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미군을 쫓아내고 다시 적화통일을 하려 한다는 불신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이 불신이 남아 있는 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으며, 그 불신은 북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 쪽에 그 불신의 씨앗이 있으며, 그 불신의 씨앗은 극우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민당이 집권하는 식으로 한국에서도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 극우의 세력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사망후 조문파문, 주사파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남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등을 돌리고, 그러다가는 다시 남북관계를 미·북회담의 속도와 병행시켜 보자고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 등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상회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확고한 방향을 갖고 남북관계를 끌어 가거나 미·북 수교 문제에 대처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극우논리라든가 주사파 논쟁같은데 정부가 허둥지둥 편승하다 보니

까 원칙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정부는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입장도 아닌 것 같고, 또 사민당의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호응하니까 박홍 총장의 입장에 서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서 교통정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동성 이장희 교수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 "찬성이다 반대다"하는 입장은 아니고 일반적인 통일 논의 부분하고 이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와 관련하여 이 교수님이 진보와 보수, 흡수통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흡수통일에 관해 정도 이상으로 문제화하고 이슈화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모두가 흡수통일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놓고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들간의 입장에는 시간적인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눠 가지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양 진영의 대립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즈음 북한과 경협을 추진해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변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측 체제로 흡수될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또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전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경협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협추진이나 유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번째는 몇년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통일정책을 논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그 목표가 뭐냐에 대해 아직도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통일된 미래의 좋은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통일을 논의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통일 그 자체가 좋으니까 통일 그 자체를 위해 우리가 뛰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등 두가지 문제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목표보다도 정책논의를 할 때는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상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상회담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해야 하는 것 보다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제와 목적이 뭐냐는 것은 결국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상호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화 혹은 정상회담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느냐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핵문제로 인해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단계에서는 통일정책을 목표로 하는 정상회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서로 관련이 됩니다만 우리 내부의 국민여론과 국민적인 요구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화 이행차원에서 국내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므로 국민여론이 자꾸 분산되어 혼란이 빚어지면 문제이기 때문에 꼭 통일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핵문제와 관련된 긴장완화가 과연 지금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우리하고 북한하고 마주 앉는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풀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놓고 저쪽에서 사문화시켜 버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원상복귀가 되겠느냐 하는 점을 볼 때 정상회담의 효율성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국민여론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꼭 정상회담이나 통일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도 국내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부정적 차원에서 볼 때, 보수적인 차원이라고 부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이나 다른 형태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아주 다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정책결정자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강경론적인 차원을 선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사고에 대해 일정한 교정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카터를 통해 우리한테 정상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미국과 우리를 비롯해서 상당히 강경정책으로 맞서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김일성이 약간의 합리적 사고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저쪽 체제가 리더쉽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강경하게, 즉 인권문제라든가 우리가 자신감을 보인다든가 미래지향적인 체제 우월성 등을 강화시켜 그들에게 이제는 과거처럼 하면 안되겠다 하는 식의 의식전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차원에서의 정상회담과 남북대화가 유용하지 그 밖의 목

표에 따르는 정상회담은 결국 저쪽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하고 더욱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병준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병준 우선 정상회담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하셨고 김일성이 죽음으로써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계속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한다 안한다고 해 가지고 국내정치에 혼란이 많았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유효하다고 천명했으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쪽에서 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가지 문제가 남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국내정세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하든지 못하든지 등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 핵문제에 대해서 일괄타결이라든지 포괄적 타결을 할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는 남북한 회담과 미북 회담을 병행시켜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도 겉으로는 동조를 하지만 실상은 남북한 관계와 미북관계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남북간에 대화가 없더라도 미북회담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럴경우 우리의 입장이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제의해서 남북대화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국내정세 입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자세를 취해

야 하지만 실제로는 초당적인 자세가 아니고 남북한 관계와 정상회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야당은 미국이나 북한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여당은 또 독자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니까 모양새가 아주 나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북한 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통일원이나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상회담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취하되 일관성을 지키면서 실무자급의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에 근거해서 핵통제공동위의 재개라든가 군사공동위, 경제공동위, 사회문화 공동위 등의 재개를 통해 북한과 공존하고 협력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체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판문점에 인민군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군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가시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관성을 갖고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 문제입니다.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는 인상을 주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국내의견이 분열되면 정부입장에 호응하는 세력들과 연합세력을 형성하고 언론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며, 지금은 남북상호사찰 얘기가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 특별사찰 못지 않게 상호사찰이 중요하며, 만약 경수

로 문제가 잘되면 경수로 준비작업 과정에서 남북간에 경제협력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언제나 남북대화를 준비하고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자꾸 언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동안 일을 그르쳤다고 아까 발표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김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진기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의 상대가 김일성일 경우는 6.25 전범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김정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로서는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김일성을 만났다면 6.25전쟁 책임이 사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25를 비롯한 그동안의 대남 가해역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로서 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외교정책이 나빠지니까 김일성이 나왔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주도해 온 정책들이 결국 긴장을 고조시켰고 김정일의 대남정책은 오히려 더 경화되고 전보다 더 한국을 무시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일성 생일때 워싱턴 타임즈, CNN, NHK 등이 방북 취재를 했는데 그중 한 기자가 왜 자꾸 미국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나서느냐고 물었더니 김용순의 대답이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전쟁상태에 있으며, 휴전체제는 전

쟁상태가 일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로 가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3개월내에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그 약속을 안지키고 있으며, 그래서 휴전협정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비난을 미국에 떠넘기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점들로 미루어 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미국하고 관계개선을 통해 수교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첫째 목표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들어온 6.25 관련문서를 보면 김일성이 하는 이야기 중에 "49년에 미군철수가 이루어진다면 38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북 수교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다음 휴전협정에 대해 북한이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도 평양에서 내세우는 대부분의 구호가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완수하자는 것인데, 북한에는 다 된 것이고 안된 게 남한이니까 이는 대남적화 혁명을 대를 이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역시 미국하고 회담을 하자는 것도 저는 자꾸 월맹이 미국하고 회담해 가지고 미군을 철수시킨 것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지명이 죽은 후 6년만에 월남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남북대화를 통해 화해나 평화정착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무력으로 남침해서 먹겠다는 것보다는, 미군만 나가면 자기네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85년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때 제가 평양에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그 사람들 인식은 남쪽 인구가 4천만인데 2천만은 자기들보다 잘살고 1천만은 자기들 보다 못사는데 못사는 사람은 자기네 편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못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모두 불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만 나

가면 저절로 무너진다고 인식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나가고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경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이 김정일이 집권한 뒤에도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남쪽에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미군이 나가면 우리가 무너져 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될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이것을 내세우면 정상회담이 되지 않겠지만 사과를 받아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되고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30년, 80세가 넘도록까지 하도록 도와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안되도록 하고 우리민족의 장래, 통일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바탕위에서 경제협력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신뢰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일로 가는 구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가령 경수로 문제만 해도 소요경비 40억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방비 중 탱크나 비행기 몇 대를 안사고 주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교육이 잘못되어 온갖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것을 10년동안 교육에 투자할 것 같으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걸 줄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북한이 사정해서 도와 달라고 할 때 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교안보연구원 백교수께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백진현 이장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교수님께서 토론의 틀을 정상회담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가능한가,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잘 정해 주셔서 토론이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하려다가 무산된 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연 김일성의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에 대해 대체로 두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일성이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하고 진짜로 뭔가 변화를 해 볼려고 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의 전술적인 책략으로 나온 것이었다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시각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미스테리가 되었으며, 저도 굳이 이에 대해 추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여론조사를 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잘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더라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상회담을 했더라면 뭔가가 있었을텐데 그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시각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배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그런 시각이 정확한 시각인지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이 바람직한가,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굳이 배격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정상회담을 하려면 성공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회담이고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섣불리 했다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국과 미국같이 평소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간에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현안이 있을때 그것을 어느 정도 좁혀 놓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타결하게 하는 준비작업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기본정책이나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고, 또 경우에 따라 북한의 의도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 없이 정상회담으로 들어갈 경우 성공적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쪽에서 미국과 전화 정상회담을 여덟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한·미 관계의 결속을 과시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채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과 정상끼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최고위급에서 통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정책이나 시각에 있어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좁혀지지 않고 그런 정지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장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이 현재와 미래핵만 동결하면 수교하겠다는 것이 주변국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주변국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성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수님께서 동서독 정상회담과 우리 정상회담을 많이 비교하셨는데, 가령 자동차는 한국에서도 자동차이고 미국에서도 자동차이지만 미국에서 자동차를 보는 관점과 한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나 주변상황 등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순 비교를 하면 자칫하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서독 정상회담의 방식이나 형태 등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많으나 정치적 의미나 배경 등을 고려하면 좀더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 회 다음은 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저는 정상회담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리더쉽이 약화되고 과거에 "No"라고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No"라고 할 수 있는 배짱도 생기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우리가 자꾸 뭔가 충격을 줘서 혼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상회담을 하자"는 등 여러가지 제안을 해서 정신 못차리게 하면, 각자의 의견이 분출되다 보면 의견이 갈리고 의견이 갈리다 보면 종파가 갈려 싸움질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시기가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과연 우리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잘만하면 미국과 중국에서 도와 줄 것 같고, 일본과 우리 정부도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해서 중국과 같은 고도성장이 되는 것을 가정할 때 시간이 과연 우리편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북한이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되어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나뉘어서 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통일은 빨리 될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많이 줄수 있는 방법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문제가 나왔는데, 장소는 서로의 수도를 상호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대방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충격보다는 폐쇄사회의 약점 때문에 저쪽의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수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돈도 더 들 것인데 돈 드는 것도 저쪽에 압력을 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지금 정상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나타날 때 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일이 나오더라도 "김정일이 무슨 정상이냐"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민주적이 아니라도 좋고 우리의 상식에 안맞아도 좋습니다. 그들의 관행이나 절차에 의해 정상으로 인정된다면, 김정일이든 아니든 그 사람과 한번 해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 충격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북한과 남한의 정통성 시비는 문제거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느냐는 것이 정통성을 좌우하고, 또 체제의 우열에 의해 국가건설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 정통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통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의미에서도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한 정상회담이 안되면 다른 회담이라도 갖는 것이 좋겠다. 즉 다른 하위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북쪽에다 다양한 충격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 회 마지막으로 길박사 한말씀 해 주시지요.

길정우 주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두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흡수통일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단지 표현을 '목표'라고 하셨는데 목표라기 보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수와 진보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애초부터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논

의하는데 있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0~40년 넘게 다져져 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분명하지만 진보진영이라는 것은 스팩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진보라고 밀어 붙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진보는 보수세력에 대한 대치개념이 아니라 보수세력을 빼놓은 나머지를 일컫는 일종의 잔여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적어도 여론선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과 정치권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사회에서는 그러한 기관들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은 마비가 되어 있고 오히려 문제점의 심각성만을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사회가 그러한 제도적인 수렴창구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국민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별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양 교수님께서 북한을 단순변수로 볼 수 없다고 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복잡성을 시간을 갖고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남쪽의 여론향방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적 합의라는 허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여년 동안 권위주의를 겪으면서 그 유산에 대한 후유증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관한 한 상당기간 동안 여론은 점점 분산의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가 지도력이나 비젼을 갖고 끌고 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회담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다분히 최고통치권자의 의지, 정치적인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여러가지 요소를 두고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젼, 의지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우리가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비젼을 바꿔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정치일정, NPT일정, 내년 6월의 지방자치제 선거 등은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될 하나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코멘트가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하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그 환상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분위기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대화의 일부이고 정상회담이 이룰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의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최우선적인 남북관계의 과제로 설정할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거기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정일이니까 곤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김정일이 주석이 안될 경우에는 곤란하지만 김정일이 정상이라면 김정일을 만나야 됩니다.

다만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저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여러가지의 대화 창구를 고려해 보면 그나마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급변

하는 주변정세에 대비해서 국내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상회담이 가능한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밀창구를 활용한다든가 예비접촉 창구인 김용순과 우리 부총리간 접촉을 통해 우리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전달한다든가 북한의 의지를 타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정상회담을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또 정상회담이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핵과 경협의 연계정책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조적인 연계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이 보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공식적인 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업인들이 오고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핵통제공동위라든가 경제·군사관련 대화를 선제의 하는 문제는 안병준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사 회 나머지 시간에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핵문제든지 정상회담문제든지 또는 기타 통일정책문제 등에 대해 고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 박사부터 시작하시죠.

차영구 핵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두개의 시각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면 북한의 변화를 얻어낼 수 있다. 핵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별사찰은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북한이 한 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묵인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남북대화는 대화 자체의 지속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북은 협상용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 체제·정권의 생존보장을 해주는 것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 북한 핵문제와 경협은 연계를 안하는 것이 좋다. 대북제재는 핵문제 해결에 역행하기 때문에 전쟁위험은 절대 피해야 한다. 북한 동포를 포용하는 전략을 추진하라. 미·북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는 바로 연계시키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사실상 남침을 포기했다. 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첫번째 시각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시각은 우리측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은 북한이 악용할 뿐이지 북한이 선의로 응해 오지 않는다. 단기적인 강력한 압력정책만이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별사찰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개의 핵도 보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대화는 안하는 것이 좋고, 의미있는 대화가 있으면 해라. 북은 핵보유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김일성·김정일이 있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핵문제 해결없는 남북경협을 할 수 없다. 대북제재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현 지도층이 있는 한 북한의 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남북관계에 조화되는 미북관계의 개선만이 가능하다. 북한은 언제나 남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두번째 시각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꼭 양자택일은 아니지만 기본노선은 하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노선을 하나 잡고 여기에 기술적인 융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노선에다

일부를 가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지그재그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개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을 하나 선정하고 그걸 좀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기술상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걸 합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사 회 다음 안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안병준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핵은 허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미국은 우선 현상동결에 치중하고 과거의 문제는 나중에 가서 논의하든지 규명하자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은 북이 핵을 기정사실화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북한 관계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반도 위기설도 결국은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한미간 조율이 비교적 잘 됐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특별사찰은 경수로 지원 이전에 특별사찰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 같아요. 특히 경수로문제만 하더라도 남북대화를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등 조율이 잘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왔다 갔다 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원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도 한 목소리가 아니므로 미국에 가서도 의회, 국방성, 학계 등과 의견조율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교육·과학문제는 다 자문기구가 있어 초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독 외교안보분야는 자문회의도 없습니다. 너무 당파로 갈

려 있어 모양도 좋지 않고 외국사람보기도 참 우습습니다. 정부가 많은 사람을 활용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초당적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국민의 여론을 구심력 있게 모아서 정책담당자들이 핵협상도 하고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도 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김동성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김동성 총체적으로 핵문제, 대북문제, 통일문제 관련한 전략체계가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양성철 교수님도 미국의 NSC와 같은 기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NSC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연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선순위 면에서 군개혁이라든가 일반사회의 개혁문제 때문에 NSC관련사항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런 기구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사불란한, 통합된 Line-Up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 의식과 자세면에서 약점이 많다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조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는 판도 짜여져 있지 않고, 국민들 마음속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이나 청사진—통일의 목표, 과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바탕과 흐름에 대한 청사진—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음단계에서 국방부는 강하게 나가고 통일원은 통일원대로 부드럽게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Bureaucratic Politics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상부에서 청사진과 비젼이 명확할 때는 그런대로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 매체가 되는 것이 언론인데 현재 언론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대북문제와 핵문제에 관련해서, 언론자체의 반성과 아울러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이나 자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작용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미국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화평연변(和平演變)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수단, 물량투입 등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쪽을 변화시키는 체제에 대한 전략적·공작적 차원의 노력이 더 강해져야 겠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중국·러시아간의 관계가 대단히 긴밀해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자비를 부탁하고 있단 말예요. 외교는 자비적 차원보다는 실무·중간·고위 레벨에서 각각 주변국과의 구조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라든가 미래지향적 상호설득을 해야만이 앞으로 협상을 하거나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백진현 핵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가 핵개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경제지원이나 수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며 핵을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북한은 핵도 가지고 관계개선도 하고 경제지원도 받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만 포기하면 관계개선 경제지원이 가능한 데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걸 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근만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채찍을 같이 써야 되고 채찍과 당근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UN 안보리에 넘기고 난 다음에도 대화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전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시각보다는 그 가운데서 여러가지 선택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에 평화구축을 하고 이게 발전하면 남북연합을 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이런 단계적인 통일방안인데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자체의 내부 모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외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그 자체의 내부적인 모순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큰 상황변화가 올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궁극적인 우리의 정책목표와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해 가령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그것을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측면에서 engagement policy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정책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engagement policy를 통해 북한을 유도해서 연합을 하고 통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붕괴했을 때 궁극적인 우리의 정책목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가? 그때 engagement가 바람직한가?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 문제인데 결국 남북한 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호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변화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북한도 변화의 조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의도분석을 할 때 너무 추측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히틀러도 알

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 식으로-지미 카터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알고 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지미카터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니 아주 소문난 악인들만 옹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우세스쿠나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세드라를 만나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종교적 시각과 현실적인 시각사이에서 혼동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바라지만 그런 징후가 현재까지는 없으며 그래서 남북한 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장희 저도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데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 대북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한의 정치적 안정이든 어떻든 간에 주체적인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역량은 있는데 그 역량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독일 통일의 나쁜점만이 강조돼서 통일에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여론지도층이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는 통일방안에 대한 논리와 아울러 여러가지 논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역시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독일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주변국가들과의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어느 분도 한·미, 한·일간 공조체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국내의 국민적 합의에 못지 않게 국제적으로 통일외교를 치밀하게 추진해야 되고, 주변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기본합의서 체제로 대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정위와 군사공동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문제 전문가들도 그 논리를 알아야 하고 정부도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를 알고 협조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기본합의서 이상가는 내용은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천이 안되는 것인데 양측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서로 안되고 있느냐? 결국 상호 불신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이란 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대화의 한 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내부의 문제중의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백인백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실체파악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정책입안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정우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대외·대북정책 일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볼 때 정부의 정책목표는 안보를 통한 생존과 아울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

· 중장기적으로 관통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적극 관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IAEA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식해야 합니다. 관여해야 할 부분은 역시 핵투명성 보장 — 이것의 방법 · 시기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 입니다. 핵투명성 보장문제에 있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꼭 지켜야 할 기본입장은 상호사찰 문제 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큰 틀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특히 재처리 시설 가동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핵화공동선언과 그 틀을 흔드는 미국의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 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주최측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1994년 11월 18일 발행

발행처 :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인쇄처 : 문 성 인 쇄 (주)

통회 94-11-52